

통일과정에서 매스미디어의 역할

1996. 10.

이 우 영

(정책연구실 책임연구원)

民族統一研究院

- 이 報告書는 民族統一研究院의 研究計劃에 依據한 自體 研究 結果임.
- 收錄된 內容은 統一問題研究 및 政策開發의 參考資料로 提供되는 것으로 刊行處의 意見을 받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님.

民族統一研究院 政策研究室

요 약

독일의 매스미디어가 통일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듯이 남한의 매스미디어도 통일과정에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하에서 본 연구는 통일문제에 대한 남한 매스미디어의 인식을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통일과정에서 매스미디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떤 것인가를 검토한 글이다. 아울러 통일을 지향하는 매스미디어가 되기 위해서 개선되어야 할 문제들은 무엇인가를 탐색하여 보았다.

1. 서론

정부의 통일정책은 매스미디어를 통하여 국민들이 알 수 있으며 동시에 국민들의 통일정책에 대한 평가나 통일의지는 매스미디어를 통하여 정부 정책에 반영된다. 매스미디어는 정부와 시민사회간 의사소통의 통로가 되는 동시에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통일환경에 대한 정보를 일반 국민들에게 제공한다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매스미디어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용하고 있는가의 여부는 통일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2. 매스미디어의 사회적 역할

감시의 기능, 상호관계의 기능, 전달기능, 오락기능과 같은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매스미디어는 현대사회에서 그 영향력이 보다 확대되고 있다. 한국의 매스미디어는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에 기여하는 등 나름대로 사회발전에 기여하였으나, 동시에 이념적으로 폐쇄적이고, 권력에 종속되었으며, 상업주의에 물들었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독일의 매스미디어는 공식적으로 통일언론을 지향하지는 않았으나 통일과정에서 적지 않은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정치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독일의 매스미디어는 동서독 주민 모두의 신뢰를 획득하였으며, 서독의 매스미디어를 통하여 동서독 주민들이 동일한 세계관을 갖게 되었다.

3. 통일문제와 남한 매스미디어

남한의 매스미디어가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것은 1980년대 후반부터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언론사는 통일문제를 전담하는 부서나 기자들을 운용하고 있다. 특히 1990년대에 들어서 매스미디어에서 북한 및 통일관계를 다루는 비중은 더욱 커지고 있다.

남한의 매스미디어는 이념적으로 반공주의적인 경향이 강하고, 북한을 불신하는 경향이 강하며, 북한의 변화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나 통일문제에서 정치적인 측면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북한 및 통일관련 언론인들은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지만, 현재 남한의 매스미디어가 정부의 통일정책 홍보기능을 가장 잘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반면에 남북한 민족 동질성 회복에는 뚜렷하게 기여하지 못하고 인식하고 있다.

4. 통일을 향한 매스미디어의 과제

통일과정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남한의 매스미디어는 반공주의 일변도의 이념적 폐쇄성을 극복하여, 다양한 사회집단의 견해가 표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매스미디어가 통일지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각종 제약을 과감히 철폐하는 동시에 매스미디어에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세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 언론사들은 통일관련 언론인의 양성과 통일관련 보도의 확충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통일과정에서 매스미디어는 남북한 주민들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미래지향적인 통일문화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며, 다양한 통일논의를 수렴하여 통일정책에 적극적으

로 반영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정부의 통일정책을 시민사회에 올바르게 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매스미디어가 시민사회의 한 축으로서 남북한 언론교류 등 통일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 론

통일과정에서 매스미디어가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매스미디어와 정부 그리고 시민사회가 공동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시도가 결실을 맺는다면 매스미디어는 통일과정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에도 중요한 정치·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경우 완전한 통일의 시간은 단축되고 통일의 어려움은 상당 부분 감소될 수 있을 것이다.

목 차

제 I 장 서론	1
제 II 장 매스미디어의 사회적 역할	6
1. 매스미디어와 사회체제	6
2. 한국 매스미디어의 특성	14
3. 독일 통일과 매스미디어	19
제 III 장 통일문제와 남한 매스미디어	34
1. 통일문제를 다루는 남한 매스미디어의 현황	34
2. 통일문제에 대한 남한 매스미디어의 인식	40
3. 통일문제에 미친 남한 매스미디어의 영향	67
제 IV 장 통일을 향한 매스미디어의 과제	77
1. 통일을 향한 매스미디어의 환경 조성	77
2. 통일을 향한 매스미디어의 역할 모색	85
제 V 장 결 론	92
참고문헌	96
부 록	103

표 목차

<표 1> 매스커뮤니케이션과 사회체계	11
<표 2> 각 신문의 주당 북한면	35
<표 3> 언론의 통일관련 고정면 및 프로그램 현황	36
<표 4> 신문사별 통일·북한 관련 보도의 연도 분포	38
<표 5> 전체 사설 중 통일 및 북한 관련 사설 비율	39
<표 6> 한국일보 통일·북한 관련 사설의 주제별 분류 ...	41
<표 7> 통일·북한 관련 사설 주제의 월별 변화	43
<표 8> 북한의 변화 여부	46
<표 9> 통일의 조건	48
<표 10> 통일주도세력과 통일방법	49
<표 11> 주요 현안에 대한 언론사별 입장	50
<표 12> 통일관련 언론인의 주요 정보원	54
<표 13> 통일문제에 대한 언론의 영향력	55
<표 14> 통일 및 북한 관련 보도 분야별 평가	56
<표 15> 통일관련 보도의 문제점과 그 원인	58
<표 16> 기사 작성시 애로사항	59
<표 17> 통일정책의 평가	60
<표 18> 통일과정에서 언론의 기본적인 역할	62
<표 19> 주요 관심사에 대한 언론인의 견해	63

그림 목차

<그림 1> 북한면의 북한기사량 변화	37
<그림 2> 통일·북한 관련 사설 양의 변화	42
<그림 3> 북한에 대한 인식	44
<그림 4> 사설에 나타난 북한관 월별 변화	45
<그림 5> 북한 변화에 대한 평가 변화	47

부록 목차

<부록 1> 통독과정에서 동서독의 언론관련 주요협정, 법규 및 선언	103
<부록 2> 평화통일과 남북화해·협력을 위한 보도·제작준 칙	113
<부록 3> 내용분석을 위한 Coding Guide	120
<부록 4> 통일 및 북한관련 언론인 설문지	123

제 I 장 서 론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신봉하는 남한에서는 각종 정책의 수행에서 국민적 동의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원칙에서 통일정책도 예외는 아니다. 국민적 여망이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가 그리고 정책이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전파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통일정책의 정당성 및 정책의 추동력과 밀접하게 연관된 문제라고 볼 수 있다.¹⁾

국민들의 의사는 본질적으로 선거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본다. 통일이정책도 각종 선거를 통해서 평가를 받고, 또한 선거에 임하는 각 정당의 공약 등을 통하여 통일정책의 방향이 정립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선거를 통한 국민 여론의 수렴이나 정책의 평가는 한계를

1) 권위주의적인 정치체제하에서는 다른 정책과 마찬가지로 통일정책 또한 국민적 동의에 기초하기보다는 정책입안자나 권력엘리트의 의사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 경우 권력엘리트나 정책입안자의 교체가 없다면 통일정책은 외면적으로 일관성이 있으며, 정책의 혼란이 야기될 여지가 적다. 또한 정책집행도 강력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정책이 일관적이고 강력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반드시 타당하거나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다. 비록 권위주의체제하라고 하더라도 국민적 동의가 없거나 국민적 여망과 배치되는 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 정책이 추구하는 소기의 목적을 획득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차원에서 매스미디어의 중요성이 부각된다.²⁾ 왜냐하면 국민들의 의견이 표출되는 것이 여론이라면 여론을 구현하고 있는 것이 매스미디어이기 때문이다. 좀더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일차적으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를 알 수 있으며, 동시에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국가는 정책을 국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다. 따라서 통일 정책이 올바르게 입안되고 추진되기 위해서는 매스미디어가 올바르게 작동되는 것이 필요 불가결한 요소가 된다.

올바른 통일정책의 수립과 집행이라는 차원에서 매스미디어가 중요하지만 이외에 다음의 두 가지 점에서 매스미디어는 통일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국민들이 북한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경로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이나 통일문제에 관해 한국의 매스미디어는 일반인은 물론이고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북한에 대한 인식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통일문제만을 놓고 본다면 한국의 매스미디어는 가장 중요한 사회화의 매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통일 이후에 대두될 사회문화적 통합 과정에서 매스미디어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 궁극적인 통일을 위해서는 새로운 공동체형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치교육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 경우 학생들이 아닌 일반

2) 정책결정과 언론의 관계에 대해서는 유재천·이민웅, 「정부와 언론」(서울: 나남, 1994), pp. 162~171 참조.

인들에게는 매스미디어가 가장 핵심적인 교육 수단이 된다.

통일문제와 매스미디어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문제의 식하에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현재 통일과정에서 매스미디어가 수행하고 있는 역할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바람직한 매스미디어의 역할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한국 매스미디어의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한 보도태도를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매스미디어가 국민들의 여론을 어떻게 수용하고 있으며, 어떻게 정부의 정책을 전파하고 있는가, 매스미디어가 통일문제와 연관하여 수행하고 있는 정치사회화의 기능은 어떤 것인가를 밝혀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II장에서는 일차적으로 매스커뮤니케이션의 사회적 역할을 검토하고 한국 언론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독일 통일과정에서 매스미디어가 수행하였던 역할을 사례연구로서 검토할 것이다. III장에서는 한국 매스미디어가 통일문제를 다루는 현황을 검토하고, 매스미디어의 보도태도를 내용분석을 통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매스미디어의 통일문제 종사자의 의식 정향(orientation)을 알아 볼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국의 매스미디어가 통일문제에 끼친 영향을 분석할 것이다. IV장에서는 통일 지향적인 매스미디어는 어떤 것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조망해 보고자 한다.

내용분석은 1993년 1월부터 1996년 7월까지³⁾ 「한국일보」의 북한 및 통일관련 사설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한국일보」를

선택한 것은 전국 대상의 주요 종합 일간지 가운데 「한국일보」가 상대적으로 중립적인 위상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중앙일보」와 「경향신문」 그리고 「문화일보」는 재벌과 관련되어 있으며, 「세계일보」와 「국민일보」는 특정 종교재단의 소유이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이념적으로 보수지향성이 강하고, 「한겨레신문」은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정치성향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⁴⁾ 분석대상 사설에 대해서 ① 주제 ② 북한에 대한 태도 ③ 북한에 대한 신뢰 ④ 북한변화에 대한 평가 ⑤ 김일성 및 김정일에 대한 평가 ⑥ 통일의 조건 ⑦ 통일주도세력 ⑧ 통일 방법의 8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부호화(coding)하여 통계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주제를 분류의 기준으로 삼은 것은 남한의 매스미디어가 북한 및 통일 관련 분야에서 갖는 주된 관심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며, 북한에 대한 태도, 북한에 대한 신뢰 그리고 북한 변화에 대한 평가, 김일성 및 김정일에 대한 평가는 매스미디어

3) 이 기간을 분석대상 시기로 삼은 것은 현재 한국언론연구원의 언론 데이터베이스가 1993년 신문부터 구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4)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보수적 성향과 「한겨레신문」의 상대적 인 진보적 성향은 보도태도를 연구하는 논문들에서 많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경수, “통일문제에 관한 한국신문의 보도태도 연구”(한국외국어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석사학위 논문, 1991); 임상원, “북방보도와 외교,” 「언론연수원 강의록」(서울: 한국언론연구원, 1989); 박조원, “남·북문제에 관한 사설 연구”(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석사학위 논문, 1990) 참조.

의 북한관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통일의 조건이나 주도세력, 통일방법은 통일을 대비하는 매스미디어의 입장을 보여줄 수 있다.

분석대상 자료는 한국언론연구원이 운용하는 언론관계 데이터베이스 KINDS에서 기사유형을 사실로 하고 주제어로 통일, 남북한, 북한을 선택하여 표집하였다. 전체 분석대상 사설은 총 283개였으나 분류의 편의상 중복을 허용하여 해당 사항마다 총 수는 다소 변화가 있었다. 이와 아울러 같은 분석대상 시기의 남북한 관계에서 주요 관심사였던 핵문제 타결, 북한에 대한 쌀 제공, 김일성 사망, 수해지원 등에 대해서는 5대 일간지의 해당 사설을 분석하여 비교하였다.

사설에서 공식적으로 표출되는 매스미디어의 통일문제 인식과 아울러 매스미디어 종사자의 통일관을 알아보기 위해서 통일 및 북한관련 기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주요 신문사 및 방송사의 통일관련 논설위원 및 해설위원과 통일원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 총 20명이 응답하였다.⁵⁾ 이와 더불어 언론인을 대상으로 수행되어진 기존의 통일관계 여론 조사 자료들도 참고 자료로서 활용하였다.

5) 중앙의 종합일간지 및 방송사 등 15개사의 통일관련 논설위원과 통일원 출입기자를 응답대상으로 삼았다. 따라서 총 대상인원은 30명이었으나 설문에 응한 인원은 20명이었다.

제Ⅱ장 매스미디어의 사회적 역할

1. 매스미디어와 사회체제

매스커뮤니케이션이란 메시지가 공적으로(즉, 개인적으로 한정된 좁은 범위의 수용자에 대한 것이 아니고), 기술적 전달수단을 통하여(미디어), 간접적으로(즉, 커뮤니케이션 파트너 상호간에 공간적 내지 시간적 거리 또는 시공적 거리가 있으며), 또 일방적으로 (즉, 송신자와 수신자 사이에 역할 교환이 없고), 분산되어 있는 공중에게 전달되는 커뮤니케이션의 한 형태이다.⁶⁾ 이러한 정의에 부합되는 현상으로 인쇄매체, 영화, 레코드, 라디오, 텔레비전, 뉴미디어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엄격히 구분한다면 매스커뮤니케이션이 총체적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고 매스미디어는 매스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산업사회화 시대의 대중은 특히 사고방식과 취미 그리고 생활방식의 평균화, 개인적인 자주성과 책임성 그리고 자발성의

6) C. R. Wright, *Mass Communication: A Sociological Perspective* (New York: 1986), 김지운 역, 「매스커뮤니케이션 통론」 (서울: 나남, 1987), p. 15; Gerhard Maletzke, *Psychologie der Massen Kommunikation* (Hamburg: 1963), 박유봉·김진홍 역, 「매스커뮤니케이션 심리학」 (서울: 법문사, 1976), p. 32.

상실로 나타나는 ‘개성의 빈곤’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매스미디어를 통해 파급되는 프로파간다(propaganda)와 상업적인 광고에 의해서 조정되는 여론이 개인의 가치와 행위를 규정하는 경향이 있다.⁷⁾ 따라서 매스미디어의 영향력은 현대 산업사회에서 더욱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매스미디어는 일반적으로 감시의 기능, 상호관계 기능, 전달 기능, 오락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해진다.⁸⁾ 보다 구체적으로 매스미디어의 기능은 문화·사회·정치·경제의 네 가지 차원에서 고찰해 볼 수 있다.⁹⁾

문화적 차원에서는 첫째, 반성적 문화능력의 함양의 기능을 수행한다. 문화적 능력이란 한 사회에 소속된 개개인이 자신의 삶의 형태,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이념과 제도가 바람직한 것인가를 반성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¹⁰⁾ 변화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사람들은 매스미디어가 전하는 각종 문화를 접함으로써 개인의 문화적 능력을 제고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매스미디어는 사회치유적 기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

7) 이정춘, 「현대사회와 매스미디어」(서울: 나남, 1990), p. 33.

8) Pamela J. Shoemaker & Stephen D. Reese, *Mediating Messages: Theories of Influences on Mass Media Content*, 김원용 역, 「미디어 사회학」(서울: 나남, 1992), pp. 55~57.

9) 이정춘, 「현대사회와 매스미디어」, 3장 참조.

10) 김주연, “산업화와 문화충격,” 「현대사회」(1985 겨울), p. 14.

다. 둘째, 매스미디어는 건전한 생활규범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매스미디어는 성실한 생활인의 행동양식을 민주적 생활규범으로 제시하는 동시에 공중도덕의 준수에서부터 공공문제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 전문직업윤리와 근로정신의 확립 등을 고양시킬 수 있다. 셋째, 건전한 여가구성과 참여매체의 활성화의 기능을 수행한다. 현대사회에서 원자화되고 다원화된 사회구성원들은 노동 이외의 여가활동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TV와 라디오와 같은 매스미디어는 중요한 오락수단이 된다. 또한 단순히 프로그램을 청취하거나 시청하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참여프로그램을 통하여 일반 시민들은 능동적인 여가활동을 즐길 수도 있다.

사회적 차원에서 첫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매스미디어의 기능은 사회화의 중심매체라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사회화의 매체로 가족, 학교, 또래집단, 직업 등을 생각할 수 있으나 현대사회와 같이 사회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이로 말미암아 생존에 필요한 사회적 지식이나 정보가 증대하는 경우에는 매스미디어가 가장 중요한 사회화의 매체가 된다. 또한 매스미디어는 단순히 정보나 지식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안내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특히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시민들의 상황판단과 행동양식 결정에 매스미디어의 역할이 결정적일 수가 있다. 둘째, 매스미디어는 사회갈등의 중재자가 되기도 한다. 이해를 달리하는 다양한 집단이 존재하는 민주사회에서

집단간 이익갈등이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이 경우 매스미디어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사회갈등을 취급할 수 있다. 즉, 매스미디어는 갈등요인을 개방적이고 공정하게 조정, 통합할 수 있는 복수단위의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여러 가지 사회 갈등에 대한 적절한 사회적 판단을 유도할 수 있다.

정치적인 차원에서는 첫째, 매스미디어는 정치적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현대 자유민주주의체제는 다양한 사회적 정치적 집단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고, 정치적 지배권력은 국민에 의해 인정받아야 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사회가 다원화되어 갈수록 다양한 세계관과 욕구체계 등이 합의를 이루고 정치적인 현안의 복잡성을 파악하는 일이란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 또한 일반국민들은 이를 세부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지식이나 시간을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여론은 오늘날 정당, 경제단체, 직업단체, 사회문화단체, 이익집단들의 이해가 조직화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대의 매스미디어는 사적 토론과정과 집회의 장이 된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조직에서 형성되는 다양한 이익들을 매개해줌으로써 일정한 안건에 대한 대중의 의사를 유도하여 여론화시킨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정치적 결정권자에게 압력을 가하게 되며 다수 대중의 이익을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둘째, 매스미디어는 시민들이 사회적 현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비판의식을

갖게 해주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매스미디어는 어떠한 현안에 대해서 어떤 집단의 관심들이 반영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관심과 이익들이 어떻게 조직되어 표출되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매스미디어가 궁극적으로 어떠한 정치현안들의 내용이 결정되며 어떻게 그것들이 정치적인 결정권자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거나 방치되는가를 보여줌으로써 시민들은 성숙된 객관의식 능력과 비판능력을 갖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매스미디어는 다양한 정치적 관심을 매개하거나 접합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매스미디어는 공적 영역의 정책적 안전들을 사적 영역에 매개하고 또한 이에 대한 사적 영역의 반응과 관심의 내용을 공적 영역에 매개해 줌으로써 다양한 관심과 이익이 접합되는 정치적 커뮤니케이션의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

경제적인 차원에서 매스미디어는 일차적으로 상품광고를 통해서 시장경제의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유통체제의 기능을 원활하게 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주식시세 등을 포함한 각종 경제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경제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광고를 제공하는 자본주의 영향력을 강화시켜 사회적인 물상화를 조장하기도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매스미디어와 사회체제와의 관계를 정리한 것이 <표 1>이다. 그러나 앞에서 이야기한 매스미디어의 사회적 역할은 원론적인 차원의 것이다. 원론적이라는 말은 바람직

<표 1> 매스커뮤니케이션과 사회체계

매스미디어의 기능			
문화적 기능	사회적 기능	정치적 기능	경제적 기능
정보전달기능			
◦ 반성적 문화 능력함양 ◦ 건전한 생활 규범의 창출 ◦ 건전한 여가 구성	◦ 사회화 ◦ 사회적 안 내자 ◦ 사회갈등의 규제	◦ 정치적 공론장 ◦ 비판의식의 창출 ◦ 다양한 관심의 집합	◦ 경제순환의 촉진
문화체계	사회체계	정치체계	경제체계
전체 사회체계			

*이정춘 「현대사회와 매스미디어」, p. 97.

한 매스미디어의 역할, 즉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매스미디어의 역할만이 이야기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현실세계에서는 매스미디어가 항상 긍정적인 역할만을 하는 것은 아니다.

매스미디어의 부정적인 역할로서 대표적인 것은 지배이데올로기의 확산기능이라고 볼 수 있다.¹¹⁾ 매스미디어가 지배이데올로기를 확산하는 것은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

11) 알튀세(Althusser)는 물리적 억압기구(repressive state apparatus)와 이념적 억압기구(ideological state apparatus)를 구별하고 있다. Louis Althusser, "Ideology and Ideological State Apparatus," trans. by Ben Brewster, *Lenin and Philosophy and Other Essays*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1971), pp. 141~148. 이념적 억압기구는 지배 집단의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학교나 종교단체 등이 이에 해당한다. 매스미디어도 동일한 기능을 하는 이념적 억압도구의 하나로 판단할 수 있다.

다. 첫째, 대중조작을 통하여 특정 사항에 대해 지배집단의 이익을 담보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권력집단은 권위를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구현하기보다는 소수의 이익을 다수의 이익인 것처럼 위장하는 경향이 있으며,¹²⁾ 이 과정에서 대중조작이 필요하게 된다. 대중조작은 권력자의 주장이나 결정에 국민대중이 적극적으로 지지하거나 찬성하도록 아니면 적어도 그에 대한 반대의견을 거부하거나 대중들이 권력자들의 결정에 대해 모르거나 침묵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중조작은 공개적인 논의를 회피하고 권력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유포시키는 여론조작의 형태로 나타난다. 전통적으로 여론조작에 동원되는 것은 관료조직과 유언비어였으나 오늘날에는 주로 대중화되고 일상화된 언론이 이러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대중조작은 곧 여론조작으로 나타나며 여론조작을 위해서는 언론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¹³⁾ 이와 같은 대중조작은 권위주의적 정치체제하에서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체제하에서도 빈번하게 이루어진다.¹⁴⁾

12) C. W. Mills, *The Power Elit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56), p. 317.

13) 이효성·신태섭, “정치권력과 대중조작: 6공 이후의 주요 유형분석을 중심으로,” 방정배·김민남 편, 『언론과 현대사회』 (서울: 나남, 1995), p. 103.

14) V. Packard, *The Hidden Persuaders* (New York: David McKay, 1957), p. 181.

둘째는 언론이 자본주의적 지배이념을 능동적으로 확산하는 경우이다. 현대 매스미디어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신문의 경우 봉건적 질서에 대항하여 부르주아지가 만든 창조물이었다. 말하자면 신문은 부르주아지의 여론기구 내지 토론기구로 출발하였으며 본질적으로 비판적인 성격을 띤 것이었다. 이러한 경향성은 자본주의가 성립된 초기에도 유지되었고, 지배계급에 반대하고 노동자들의 권익을 주장하는 급진적인 신문들이 탄생하기도 하였다.¹⁵⁾ 그러나 지배계급의 탄압, 경쟁체제하에서 광고수주의 어려움, 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시설의 필요성 등의 이유로 급진적이거나 비판적인 매체들은 몰락의 길을 걷게 되고 자본가가 언론매체를 명실상부하게 지배하는 상황이 초래되었다.¹⁶⁾ 현대 자본주의체제하의 대부분의 매스미디어는 근본적으로 자본가의 이해와 유리될 수 없으며, 구조적으로 지배 이데올로기를 확대재생산할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매스미디어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고, 부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매스미디어의 부정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입장에 있는 학자들이라도 매스미디어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15) J. Curran, "Capitalism and Control of the Press, 1880~1975," in Curran et al., *Mass Communication and Society* (California: Sage Pub., 1979), pp. 203~206.

16) 김해식, 「한국언론의 사회학」 (서울: 나남, 1994), p. 40.

이들은 자본주의 사회의 매스미디어가 가지는 정치적 한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며,¹⁷⁾ 동시에 매스미디어에 일반 시민들이 일방적으로 종속되거나 매스미디어를 맹신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한국 매스미디어의 특성

다른 사회현상과 마찬가지로 매스미디어도 그것이 처한 사회 역사적 맥락(social-historical context)에 따라 사회적 역할이 다르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 매스미디어의 특성을 고찰할 필요성이 생겨난다.

현대 한국의 매스미디어는 해방과 더불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미군정은 초기에 언론에 대하여 매우 개방적이고 유희적인 태도를 취하였으나 정치적인 좌우격돌이 심화됨에 따라 좌익언론을 봉쇄하고 우익언론을 보조하는 등 직간접적으

17) 매스미디어에 대한 비판은 지배이데올로기 비판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매스미디어는 이를 소유하고 통제하는 계급을 위해 허위의식(false consciousness)의 생산을 통해서 지배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 경우이다. J. Curran, M. Gurevitch & J. Woolacott, "The study of the Media: Theoretical approaches," in M. Gurevitch, T. Bennet, J. Curran, & J. Woolacott (eds.), *Culture, Society and the Media* (London: Methuen, 1982), p. 26. 이 경우 매스미디어 비판은 지배이데올로기나 해계모니론, 혹은 지배계급을 비판하기 위한 수단의 의미가 있다.

로 매스미디어에 간섭하게 되었다.¹⁸⁾ 미군정은 단정을 반대하는 신문을 폐간하였고, 방송국에는 감독관을 파견하여 군정이 편성권을 접수하고 미군정의 공보 및 홍보활동을 위하여 방송을 활용하였다.

1공화국 시기에는 미군정시대의 언론정책이 지속되어 진보적인 언론뿐만 아니라 반정부적인 언론매체에 대해서까지 정·폐간을 강제하여 반공노선의 보수적 언론이 안정적인 지위를 확립하게 된다.¹⁹⁾ 또한 전쟁 이후에는 물자가 부족하여 신문용지 등의 구입에 원조자금이 할애되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국가의

18) 이 과정에서 특히 귀속재산의 처분이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일인의 소유였던 언론기관과 인쇄시설 등의 불하를 통하여 좌익 내지는 진보적인 경향의 세력을 견제하고 우익인사가 새로운 언론기관의 주도자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김해식, 「한국언론의 사회학」, pp. 51~53.

19) 1948년 정부가 수립된 이후 9월에 언론정책 7개항이 발표되고 해당 기사의 보도를 금지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대한민국의 국시·국책을 위반하는 기사 ② 정부를 모략하는 기사 ③ 공산당과 이북 괴뢰정권을 인정 내지 비호하는 기사 ④ 허위의 사실을 날조·선동하는 기사 ⑤ 우방과의 국교를 저해하고 국위를 손상하는 기사 ⑥ 자극적인 논조나 보도로서 민심을 격양·소란케 하는 외에 민심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기사 ⑦ 국가의 기밀을 누설하는 기사. 송건호, “한국 현대언론사론,”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언론과 사회」 (서울: 민중사, 1983), p. 173. 미군정기에 정부의 제재를 받은 언론은 대부분 좌익경향의 신문들이었으나 1950년대에는 「동아일보」나 「경향신문」과 같이 반정부적인 논조를 갖고 있었던 신문들이 주로 제재를 받았다. 위의 책, pp. 59~60.

영향력으로부터 매스미디어가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 또한 국가가 직업 매스미디어를 경영하거나(서울신문·대한민국 공보처 방송국), 재벌기업이 경영하는 경우도(연합신문: 쌍룡) 생겨났다.

4·19로 탄생한 2공화국은 공보실을 폐지하고 신문의 설립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등 언론자유를 보장하는 정책을 지향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반공주의는 엄격하여 혁신계를 대표한 「민족일보」는 등록과 제작, 지국 설치 등에 대하여 제한을 받았다.²⁰⁾ 5·16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획득한 군사정부는 언론사를 정리하고 언론사를 감시·감독하는 공보부를 설립하였고, 언론 검열을 실시하고 단간제를 실시하는 등 매스미디어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를 강화하였다. 이어 등장한 박정희 정권은 매스미디어의 자유보다는 책임을 강조하면서,²¹⁾ 한편으로는 언론사에 대한 특혜를 부여하여 언론사의 자본축적을 추진하였고, 한편으로는 언론을 통제하는 법을 제정하거나 언론인을 구속하는 등 강력한 통제정책을 실시하여 언론을 장악하였다.²²⁾

20) 위의 책, p. 77.

21) 김성문, “한국미디어의 정치사회학,” 방정배·김민남 편, 「언론과 현대사회」, p. 269.

22) 자본 축적을 정부가 보조한 대표적인 사례가 「조선일보」의 「코리아나」 호텔 신축이며, 언론을 통제하는 법령제정의 대표적인 예가 1964년의 「언론윤리위원회법」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언론인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는 1968년의 「신동아 사건」이 하나의 예가 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김해식, 「한국언론의 사회학」, pp. 109~

또한 이 기간 동안에 민영방송국이 출현하고(동양방송·문화방송), 재벌의 매스미디어 진출이 본격화되었다(동양방송·중앙일보: 삼성).

유신체제가 성립되면서 언론사의 통폐합을 시행한 정부는 프레스카드제도를 실시하여 기자 수를 감축하고, 방송법(1973)을 제정하고, 1975년의 동아·조선사태에서 기자들을 대거 해고하는 등 직접적인 언론 통제를 강화하였다. 이와 동시에 언론인 금고의 제정, 매스미디어 기관의 자본금 증액 등 지원을 통하여 매스미디어를 통제하였다.

5공화국에서는 언론통폐합, ‘보도지침’의 제정,²³⁾ 기자들에 대한 대량 해고 등을 통하여 언론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언론기본법을 제정하고 한국방송광고공사, 방송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방송심위원회 등의 법정 언론 유관기관을 설립하여 언론에 대한 행정적 통제체계를 완성하였다. 이와 아울러 언론인에 대한 처우개선 등의 특혜를 제공하고, 대대적인 증면을 허용하였으며, 시설 확충시에 세제상

122 참조.

- 23) 5공화국에서는 종전에 각 정보기관이 나누어 담당하던 언론통제 창구를 행정적으로 단일 창구로 수렴하고 통제를 공식화하기 위해서 문화공보부 내에 홍보조정실을 신설하였고 이 기구는 ‘보도지침’을 하달하는 기능을 담당하였다. 보도지침에서는 뉴스의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까지 규제하였다. 보도지침을 이행하는 비율은 방송사의 경우 거의 100%에 가까웠고, 6개 일간지는 77.8%, 정부지는 92.9%에 달했다. 위의 책, pp. 161~164.

의 혜택을 주는 등 회유정책을 실시하였다.²⁴⁾ 6·29를 통하여 출범한 6공화국에서는 언론에 대한 각종 규제조치들이 대폭 완화되었다. 정치적이고 행정적인 규제가 풀린 결과 새로운 매체들이 등장하였고 이러한 가운데 상업주의적 경쟁이 치열해지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매스미디어 신설이 한층 자유로워진 김영삼 정권하에서도 지속되고 있다.²⁵⁾

한국의 매스미디어의 변천과정을 고려할 때 그 특성을 다음의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이념적으로 반공주의적인 경향성이 뚜렷하다는 점이다. 군정기부터 좌익성향의 매체들은 탄압을 받았고, 전쟁을 치른 이후에는 진보적인 성향의 매스미디어들은 설자리를 잃었다. 더욱이 5·16 이후 군사정권이 30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보수적인 언론만이 생존할 수 있었다. 이념적 편향성은 궁극적으로 다원화되고 분화된 사회계층의 다양한 의견이 고르게 표출될 수 있는 통로를 봉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국가의 언론에 대한 직간접적인 통제의 정도가 심하다는 점이다. 몇 차례의 정변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정치상황에서

24) 이러한 결과 1981년에서 1987년까지 4대 중앙일간지(조선·동아·중앙·한국)의 연평균 매출액 증가비율이 19%에 달하게 된다. 윤영철, “사회변동과 언론통제,” 유재천 외, 「한국사회변동과 언론」 (서울: 소화, 1995), p. 197.

25) 6공화국과 김영삼 정권의 매스미디어 정책에 대해서는 윤영철, 위 외 글, pp. 202~220 참조.

언론기관이 정리되는 극단적인 조치도 취해졌으며, 언론인에 대한 해직, 언론관계 각종 법령의 제정, 유관기관의 설립 등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언론매체를 간섭하였고, 동시에 재정지원 등의 간접적인 방식으로 언론매체를 통제하여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언론기관의 정치적 독립성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할 수 있으며, 정부에 대한 건전한 비판 기능이 위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매스미디어가 자본주의에 직접 종속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체제하에서 매스미디어는 경쟁이 불가피하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매스미디어가 거대 자본화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현재 재벌이 지배하는 신문사가 3개에 이르고, 뉴미디어의 일종인 케이블 TV 등은 재벌이 직접 참여한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또한 한때는 재벌이 방송을 직접 경영하는 등 거대자본이 매스미디어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본가 집단이나 생산자 집단의 의사는 과대 표출되는 반면, 이들과 이해가 다른 노동자 집단이나 소비자 집단의 견해는 상대적으로 소외될 여지가 크다.

3. 독일 통일과 매스미디어

독일 통일과정에서 매스미디어의 역할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통일 이전 서독의 언론정책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서독(독일연방공화국)은 국가가 탄생 될때부터 미국·영국·프랑스 등과 동질적인 서방자유주의 민주국가로 규정되었다. 그것은 독일인들과 서방점령국이 나치 독일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는 민주화원칙에 합의하였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비나치화, 비중앙집중화, 연립주의적 분권화 등이 추구되어 서독은 자유주의적 민주국가로 될 수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서독은 의회주의적, 다당제적, 법치적 그리고 지방분권적 국가체제를 완비하게 된다.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에서 언론 정책은 언론이 국가에 종속되거나 정치적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언론이 국가로부터 독립성을 가지고 시민사회와 국가를 중재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중재자의 위치를 점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게 된다. 다시 말해, 시민사회의 의견참여와 여론형성, 그것에 의한 국가정책의 견제와 비판을 가능하게 하여 민주적 정치지배가 언론에 의해 가능해지도록 하는데 민주적 언론정책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서독의 기본법 5조에는 “모든 국민은 말·글 그리고 어떤 대상에게든지 의견을 자유로이 표현하고, 제한 없는 정보와 지식을 출처에 관계없이 수용하고 인지할 권리를 가진다. 언론에 대한 자유와 그리고 신문·방송·필름을 통한 보도의 자유는 보장되며 국가검열은 금지된다”고 되어 있다. 이것은 언론자유정신의 실현에 언론정책의 궁극적 목적

이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독인들의 이러한 헌법적 기본권은 동독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게 하였고 동독 공산주의자로부터의 방송이나 유인물을 서독 주민들이 수용, 인지할 수 있게 해주었으며 그것을 제한할 수 있는 하위법의 제정을 불가능하게 했다. 또한 국가로부터 언론과 미디어의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독일은 언론 및 매체입법을 주의회 소관으로 헌법에 명문화해 놓았다. 이에 따라 서독에는 11개 주 수만권의 많은 신문, 출판법이 존재하였고, 9개의 공영방송법이 입법, 운영되었다.²⁶⁾

서독의 언론정책의 핵심은 국가가 언론현실에 개입하거나 간섭하는 것이 엄격하게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그럼으로써 언론이 자율성을 향유하여 사회여론기구로서 그리고 국가 정책적 횡포를 견제할 수 있는 국민적 도구가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국가가 언론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해서 언론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자본이나 광고 같은 경제, 사회 세력에 의해 언론 자유가 유린될 수 있는 것이 자본주의 언론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국가는 간섭과 억압을 전제하는 통제정책이 아니라 질서를 회복하는 조정정책을 추진할 수

26) 방정배, “동서독 국가의 정책변화와 언론,” 김정기 외, 「전후 분단 국가의 언론정책: 독일의 동방정책과 한국의 북방정책 비교 연구」 (서울: 한국언론연구원, 1995), p. 10.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서독의 언론 정책은 단순한 자유방임적인 정책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서독이 사회민주국가적인 성격을 갖고 있듯이 언론현실에 대해서는 국가가 조정자로 개입, 비민주적인 언론혼란 상황을 극복하여 언론이 주어진 자유와 기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적극적인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언론사가 소규모의 언론들을 매입하고 언론집중이 초래될 때, 즉 다양한 사회적 의견이 다원적인 언론을 통해 형성될 수 없는 언론현실이 빚어질 때 국가는 ‘언론집중통제입법(1976)’과 같은 법을 통하여 언론의 집중을 막을 수가 있다.

서독의 이러한 언론정책 결과 언론인들이 객관적, 사실적, 평등적 보도의 자유를 획득하였고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경영적 간섭으로부터 독립적인 편집활동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체제우월성에 기반한 우월적인 언론제도의 생산이며 이로써 진정한 의미에서 언론보도의 형평성, 객관성, 진실성이 유지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종전 이후 미국·영국·프랑스의 지배하에서 서독의 초기 언론 정책은 점령국별로 다소간의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기존 나치시대의 언론기관과 언론인에 대한 대규모 숙청이 이루어졌으며, 나치에 부역한 인물들을 제외하고 비교적 자유롭게 언론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었다는 점은 모든 점령국 언론정책의 공통적인 특징이었다.²⁷⁾ 그러나 점차 냉전분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점령군에 대한 비판이 금지되고 공산당 소속의 기자가 해고되는 등 서독의 언론정책은 점차 반공주의적 성향을 띠게 된다.²⁸⁾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방 점령국은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적 사적 소유를 전제로 하여 이른바 정치적, 경제적 이해로부터 독립된 언론을 점령지에 이식하려고 노력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각 주는 발행인 및 언론인 협회를 조직하고 독자적인 언론법을 제정하기 시작하였다.²⁹⁾ 비록 반공주의적인

27) 강태완, “동서독 신문의 구조, 통일정책 및 보도 태도에 관한 연구,” 김정기 외, 「전후 분단국가의 언론정책: 독일의 동방정책과 한국의 북방정책 비교 연구」, pp. 118~125.

28) 1948년까지 부정기적으로나마 반입되던 동독지역의 각종 인쇄물도 미군정에 의해 반입이 금지되었다. 박종수, “동서독 언론교류 사례,” 원우현 외, 「남북한 언론교류」 (서울: 한국언론연구원, 1992), p. 205.

29) 미 점령당국은 1948년 9월 30일 「언론법 제정에 관한 미군정의 지령」을 내고 언론법의 지침을 마련하였는데 그 골자는 다음과 같다. ① 새 입법은 자유언론을 보편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② 새 입법은 정부여당의 영향과 특별한 이해관계의 지배로부터 언론을 보호해야 한다 ③ 새 입법은 공적 이해에 관한 정보를 취재하고 공포할 수 있는 자유언론의 우선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④ 새 입법은 경찰이나 여타의 행정기관이 신문과 출판물의 자유로운 유통과 배포에 자의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⑤ 새 입법은 나치 치하에서처럼 군법회의, 언론회의소 기타 다른 형태의 조직적인 언론통제의 부활을 특히 배제하여야 한다 ⑥ 새 입법은 신문이나 공포된 자료의 내용에 대한 검열이나 통제를 막아야 한다. 이와 같은 지침은 이후 서독 언론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위의 책, p. 123.

원칙이 유지되었으나 점령군은 점차 통제 위주의 정책에서 조언과 지원정책으로 전환하여 민주적 언론이 서독에 형성되었다.

서독 언론이 정부나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운 민주적인 형태를 띠고 출발하였으나 동서독이 긴장상태에 있었던 1960년대까지는 서독의 매스미디어도 반공주의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특히 동독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서베를린지역에 설립된 ‘미군주둔지역방송국(RIAS)’과 서독의 ‘자유베를린방송국(SFB)’은 서독을 비롯한 서방측의 대외선전창구로서 방송전파를 통해 자유민주주의 이념방송과 사회주의의 허구성을 폭로하는 심리전방송을 전개하였다. 이에 대해 동독은 서독 TV를 반동적인 이데올로기의 전달자로 간주하고 동독국민들을 그 영향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³⁰⁾

서독에서 동독에 대한 매스미디어 정책을 수정하게 되는 것은 할슈타인 원칙을 철저히 지켜왔던 에르하르트 정권의 뒤를 이어 키징어를 수반으로 하는 기민-사회당의 대연정이 실시되어 동독정책의 변화가 나타난 이후의 일이다. 하나의 예로 1968년에 서독 연방의회는 동독으로부터의 신문, 잡지의 반입을 허가하게 된다.³¹⁾ 그러나 무엇보다도 1972년 12월에 체결된

30) 박종수, “남북한 평화통일을 위한 방송의 역할,” 문화방송창사 30주년 기념 방송연구논총 「방송과 문화」 (서울: MBC, 1991), p. 312.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주의 공화국의 상호관계에 대한 기본조약」, 이에 앞서 11월에 체결된 「동서독 언론교류 관련 합의문서」 그리고 이보다 1년 앞서 체결된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주의공화국 우정성 대표단간의 협상에 관한 의정서」가 서독 매스미디어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합의 문서들의 체결로 인하여 컬러방송 시스템 차이와 같은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1952년이래 왕래가 불가능하였던 서독 특파원의 동독 거주가 가능해짐으로써 서독의 매스미디어가 통일과 직접적인 연관을 맺게되는 계기가 되었다.

서독 특파원의 상주를 허가하면서도 동독은 취재에 대한 여러 가지 제한 규정을 만들었고, 동독에 비판적인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들을 추방하거나 해방 언론기관의 지국을 폐쇄하는 경우도 있었다.³²⁾ 그러나 동독 정부의 서독 언론인들에 대한

31) 서독에서 동독의 인쇄매체 반입을 허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서독으로의 수입은 늘어나지 않았는데 이는 동독 정부가 자신의 매체들이 서독지역에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서독의 수입요청에 제한적으로 응하였기 때문이다. 1968년에 들어서서 전면적인 인쇄물 반입이 허가되었으나, 그 이전에도 적대적인 내용의 신문·잡지는 주 내무장관의 허가로 서독으로의 반입이 가능하였으며, 전문잡지는 허가 없이 반입이 가능하였다. 박종수, “동서독 언론교류 사례,” p. 207.

32) 동독은 서독 특파원의 실질적인 활동이 시작되기 전인 1973년 2월 「독일민주공화국에서의 외국 언론사와 특파원의 활동에 관한 규정」을 통과시켜 취재에 제한을 가했다. 이에 따라 방송사인

경고, 취재 방해, 추방, 감시 등의 제한 조치가 서독 매스미디어의 활동을 위축시키지는 못하였다. 서독의 특파원들은 동독의 실상을 서독을 비롯한 서방세계에 알리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였고, 취재과정을 통하여 동독주민들이 자유언론과 접촉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일종의 정치사회화의 매체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서독 특파원으로 파견된 사람의 대부분이 동독지역 출신으로 자신들의 친구, 친지 등을 취재원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망구조(network)가 구축되는 결과를 가져왔다.³³⁾

독일통일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주목받은 것은 TV이다. Helmut Hanke는 동독의 붕괴를 “미디어 혁명”으로 주장하면서 “텔레비전을 통하여 실제 존재하는 사회주의가 독일 땅에서 사라졌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는 “텔레비전이 없었다면 1989년 11월 9일 동독의 시민들이 베를린 장벽을 넘으려는 시도는 하지 않았을 것이며 또한 텔레비전을 통해 시민들은 단결할 수 있었다”라고 말한다.³⁴⁾ 그는 동독주민들이

ARD의 기자가 1976년에 추방되고, 1978년에는 주간지 Spiegel지의 주재사무실이 폐쇄되었다. 김광호, “통일전 동서독의 방송정책 및 보도,” 김정기 외, 「전후 분단국가의 언론정책」, pp. 205~207.

33) 위의 글, p. 208. 특파원의 역할에 대해서는 Peter Pragal, “당시의 동독 특파원이 본 언론 상황,” 한국언론연구원 주최 「광복 50주년 기념 한독국제심포지엄」 발표 논문, 김정기 외, 「전후 분단국가의 언론정책」 참조.

34) Helmut Hanke, “Kommunikation in Aufruhr - Meiden im Wandel,”

텔레비전의 보도를 통하여 동독의 경찰들이 천안문사태처럼 데모대에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지 못할 것을 알게 되어 거리로 나와 데모를 할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 물론 K. R. Hesse와 같은 사람은 “방송은 단지 혁명을 촉진하는 기능을 하였고, 텔레비전의 보도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면서 혁명을 극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더라도 ‘미디어 혁명’이란 표현은 미디어에 대한 지나친 강조”라고 주장한다. Dieter Stolte 역시 “미디어에 대한 수용자의 수용과 실제적인 행위 사이의 관계는 거의 조사된 바가 없다”고 하면서 “서독과 동독의 행위 사이에 일원적인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다”고 본다.³⁵⁾

그러나 독일통일 과정을 텔레비전에 의한 혁명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과장되었다고 하더라도 서독 TV는 반체제와 개혁 세력들에게 더욱 강력한 소리를 제공했고, 대중에게 서방으로 향하는 망명자의 탈출과 물결을 알렸으며, 집단적인 반체제의식 출현을 촉진시켰고 따라서 TV의 영향력은 대단히 컸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TV가 통일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 동독주민들이 서독 프로그램을 많이 시청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서독과 달리 중앙집권적인 방송체계를 확립한 동독에서는 1956년 텔레비전의 전송방식을 OIR방식에서 서

김광호, “통일전 동서독의 방송정책 및 보도,” p. 180에서 재인용.

35) 위의 글, p. 181.

방과 같은 CCIR방식으로 전환하여 동서독간에 텔레비전 상호 시청이 가능해졌으며, 1969년 일부 컬러 방송을 시작하면서 동독은 서독의 PAL방식이 아닌 SECAM방식을 도입하였으나 동독주민들은 서독방송을 흑백으로 시청할 수 있었으며 추가장치를 구입하면 컬러로도 시청이 가능하였다. 1970년대 초까지 동독은 서독 방송시청을 방해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나³⁶⁾ 뚜렷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리고 기본협정체결 이후에는 방송시청에 제한을 두지 않아 지리적으로 난시청 지역이었던 드레스덴(Dresden) 주의 주민들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서독 방송을 시청할 수 있었다. 1980년대에는 전체 동독주민의 90%가 서독 방송인 ARD와 ZDF를 수신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³⁷⁾

36) 동독은 주민들의 서독방송 시청을 법적으로 금지한 적은 없다. 1958년의 개정형법은 서독 방송의 개인적 수신을 금지한 것이 아니라 서독방송의 수신을 조작하거나 그 내용을 반체제적인 목적에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행위를 금지하였다. 그러나 동독은 신축 아파트에 공동안테나를 설치하여 서독 방송의 시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서독 방송을 수신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또한 1961년에는 서독 방송 시청을 위해 설치된 안테나는 제거하거나 방향을 돌리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점차 강압적인 방식은 없어지고 주로 의무감에 호소하는 정책을 폈다. 위의 글, pp. 217~218.

37) 서독 방송의 수신이 불가능하였던 드레스덴 지역은 동독에서 ‘무지한 자들의 계곡’ 혹은 ‘죽은 눈동자의 계곡’이라고 불렸다. 위의 글, p. 216.

상호시청이 가능하였으나 동독 텔레비전이 서독에서 큰 역할을 하지 못한 반면, “저녁마다 독일의 전파적 재통일이 벌어진다”라고 표현될 정도로 동독주민들은 적극적으로 서독 방송을 시청하였다. 독일의 시사주간지 ‘Spiegel’에 따르면 동독주민의 85%가 서독의 시사뉴스 프로인 ‘Tagesschau’와 ‘Heute’를 시청하였다고 한다.³⁸⁾ 1980년대에는 당간부들이 공개적으로 서독 방송의 내용을 언급하기도 하고 동독주민들이 서독주민의 실상을 아는데 유용하다는 견해도 표명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동독은 공동안테나나 유선방송망 등을 통하여 동독 주민의 서독방송 시청욕구를 충족시키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방향 전환은 동독 지배층의 자신감에서 기인하였다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주민들의 서독 방송욕구를 현실적으로 막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동독은 서독 방송의 시청을 인정하는 대신, 서독 방송의 내용을 부정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서독 방송에서 지적한 동독내 문제와 유사한 서독 사회의 문제를 지적하는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등 ‘반대정보’를 제공하는데 주력하였다.³⁹⁾

동독주민이 서독 방송을 많이 시청하였다는 것보다는 서독 방송의 보도내용을 신뢰하였다는 점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⁴⁰⁾ 동독인들은 서독 방송이 국내문제를 보도할 때의 중립

38) Spiegel, 1985, No. 45, p. 99.

39) 김광호, “통일전 동서독의 방송정책 및 보도,” p. 221.

적이고 비판적인 태도를 수용하여 자신들이 직접 평가할 수 없는 외국에 관한 보도나 동독의 보도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동독 방송을 평가하게 되었다. 즉, 동독 방송에서 동독의 업적을 찬양하는 내용은 축소하여 해석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은 실제로 더 심각할 것이라고 추측하게 된 것이다.

동독주민들의 서독 TV 시청은 동서독주민들이 이질감을 극복하고 민족적 동질성을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동일한 방송을 시청함으로써 동서독주민들이 서독이나 동독 현실에 대한 공통적인 시각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도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그리고 비판적이고 중립적인 서독 방송을 접함으로써 동독주민들은 일정한 수준의 민주주의 교육을 받게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정치적인 차원에서는 동독주민들은 동독의 방송과 서독의 방송을 비교함으로써, 공산주의 체제 유지에 필수적인 국가적 선전 도구로서 동독 방송의 효율성이 심하게 훼손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체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
- 40) 심지어 동독 텔레비전이 몇 시간에 걸쳐 호네커의 국내외 주요 문제에 대한 연설을 중계해도 서독의 ARD와 ZDF가 이에 관한 보도를 하면 그때야 동독주민이 관심을 가졌다는 이야기도 있다. Jürgen Weiß, “독일 통일 전후의 동서독 언론 보도,” 한국언론연구회 주최 「광복 50주년 기념 한독국제심포지엄」 발표 논문, 김정기 외, 「분단국가의 언론정책」, p. 433.

서독이 통일 지향적인 언론정책을 추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⁴¹⁾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매스미디어의 역할이 증시되는 것은 일종의 아이러니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서독 매스미디어의 어떤 특성이 통일과정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남북한의 통일문제에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첫째, 서독의 매스미디어 정책이 개방적이었다는 점이다. 정치체계가 다양한 정치적 스펙트럼을 인정하는 다원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듯이, 다양한 사회집단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매스미디어 체계를 갖추는데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권력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자본이나 상업주의로부터 자유로웠던 언론은 서독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었고, 이러한 신뢰감이 동독주민들에게도 전파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프로그램의 형평성을 생각할 수 있다. 독일에서 거의 유일하게 통일 지향적이었던 프로그램인 ZDF의 'Kennzeichen D'는 서독과 동독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언제나 비판적이며 중립적인 태도를 견지함으로써 동서독주민들의 커다란 호응을 얻을 수가 있었다.⁴²⁾ 이러한 제작 태도는 매스미디어가

41) 우리가 생각하는 통일언론이라는 것은 개념적으로나 실천적으로 독일에는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최선열, "통일에 대한 언론인들의 역할 인식," 김정기 외, 「전후 분단국가의 언론정책」, p. 409.

42) 박종수, "동서독 언론교류 사례," p. 244; 김광호, "통일전 동서독의 방송정책 및 보도," p. 220. 동독주민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서

동서독주민의 심리적 이질화를 극복하고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는 가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근본 토대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언론인들의 책임의식이라고 볼 수 있다. 서독에서는 공식적으로 통일언론을 지향하지도 않았고, 또한 통일지향적인 기사를 작성하도록 강제하는 분위기도 존재하기 않았다.⁴³⁾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독의 기자들은 동서독간 긴장완화에 대한 강한 책임의식이 있었다. 동독에 상주한 서독의 특파원들은 동독의 공산주의자들에게는 동독정권의 비방자였고, 흑백논리를 기대했던 서독의 보수주의자들에게는 공산주의의 미화자로 매도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긴장완화 보도에 확신을 가졌던 한 기자는 사회주의 약점만을 보도, 논평하기보다는 주민들이 그 ‘감옥’과 같은 상황에서도 틈새를 찾아 개인적 행복을 추구하는 삶의 모습을 그리는데 확신을 가졌다고 한다.⁴⁴⁾

독의 프로그램이 ZDF의 ‘Kennzeichen D’를 비롯하여 ARD와 ZDF의 정기뉴스 등 보도관계 프로그램이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정춘·전석호, 「분단국의 통일과 방송정책」(서울: 청림출판, 1991), pp. 139~141.

43) 서독에서 통일지향적인 언론정책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 서독의 매스미디어가 반통일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통일지향적인 언론정책이 부재하였던 것은 서독이 통일정책보다는 분단관리정책을 우선시하였다는 사회정치적 상황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44) Peter Pragal. “당시의 동독 특파원이 본 언론 상황,” p. 451.

넷째, 동독의 개방적인 언론정책도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비록 많은 제한을 두었으나 특파원간에 교류를 허용하였고, 사회적 압력에 의했다고는 하나 서독 방송의 시청을 허용한 동독의 정책이 없었다면 독일의 매스미디어가 통일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없었을 것이다.

국가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매스미디어 정책, 형평성을 유지하는 각종 프로그램, 나름대로 역사의식이 투철하였던 언론인들, 그리고 서독의 매스미디어를 수용한 동독의 통일정책의 결합이 독일통일에서 매스미디어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이유라고 볼 수 있다.

제Ⅲ장 통일문제와 남한 매스미디어

1. 통일문제를 다루는 남한 매스미디어의 현황

대부분의 남한 언론사들은 편집국이나 보도국에 북한부를 두고 있다. 언론에서 북한부를 설치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후반 남북한관계에 영향을 주었던 일련의 사건들이 계기가 되었다. 여러 사건 중에서도 특히 1989년의 국내의 대표적인 재벌인 현대 정주영 회장의 방북은 많은 언론사들이 북한 전담 부서를 설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기존의 주요한 남북관계 사건들이 정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폐쇄적인 북한체제의 특성이나, 남북한의 현실 그리고 보안법의 문제 등으로 정부나 관영통신인 내외통신의 자료에 의존하여 기사를 작성하는 것을 당연히 여겼던 언론사들은 북한관련 보도를 독자적으로 취급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전의 당국자간의 회담이나 적십자회담의 경우와는 달리 정주영 회장의 방북은 정부뿐만 아니라 특정 개인이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해야하는 현상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문제에 봉착한 언론은 북한 뉴스를 전담할 부서를 설치해야겠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북한부 신설은 문익환 목사, 서경원 의원의 밀입국 사건 등으로 남북관계가 긴장되어

잠시 유보되었으나 이후 남북고위급 회담이 진행되어 많은 뉴스거리가 생겨나자 다시 추진되었다.⁴⁵⁾

이미 1988년에 북한부를 설치하였던 「서울신문」의 뒤를 이어 1989년부터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북한부를 신설하거나 정치부 내에 북한팀을 구성하였고, 그렇지 않은 언론사의 경우도 북한을 전담하는 기사를 임명하였다. 또한 국무총리실이나 외무부 출입기자가 겸직하던 통일원 출입기자를 독립적으로 운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한국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세계일보」, 「MBC」 등은 통일과 관련된 연구소를 독립적인 조직으로 활용하고 있다. 1996년 현재 각 언론사에서 북한을 담당하는 기자 수는 팀장 혹은 부장을 포함하여 3~5명이며, 통일원을 출입하는 기자는 25개 언론사에서 34명에 이른다.

<표 2> 각 신문의 주당 북한면

신문	한국	동아	조선	경향	문화	서울	중앙	한겨레	세계
면수	2/3	1/2	1/2	1/2	2/3	1/2	2/3	1/2	4/3

* 중요사건의 유무에 따라 북한면의 비율은 유동적일 수 있음.

** 1개면은 광고면을 포함한 것임.

북한부 혹은 북한팀의 신설은 신문과 방송에서 독립된 지면

45) 김정탁, “북한부 취재보도의 문제점,” 김정탁 외, 「남북통일과 언론」 (서울: 한국언론연구원, 1991), p. 139.

과 프로그램의 신설로 이어졌다(각 언론의 북한 보도 실태는 <표 2>, <표 3> 참조).

<표 3> 언론의 통일관련 고정면 및 프로그램 현황

매체별	언론사	고정면	담당부서
신문	조선	북한소식	북한부
	중앙	오늘의 북한	북한부, 통일연구소
	한국	지금 북한	북한부
	한겨레	북한	민족국제부
	세계	북한에선 지금	국제부
	국민	북녘의 오늘	통일원 출입기자
	경향	북한 통신	특집부
	동아	북한소식	정치부
매체별	언론사	프로그램명	방송시간
TV	KBS1	남북의 창	일 07:30~08:00(30분)
	MBC	통일전망대	토 06:35~07:00(25분)
	EBS	통일의 길	화 19:05~19:30(25분)
	YTN	통일로	월~금 18:30~19:00
라디오	KBS1	남과 북 하나로 가는 길	일 00:05~00:45(45분)
	MBC	두고 온 산하	일 06:05~07:00(55분)
	CBS	통일로 가는 길	매일 22:00~22:30(30분)
	EBS	통일의 길	일 08:30~09:00(30분)
	BBS	주간 북한 소식	일 08:10~08:15(5)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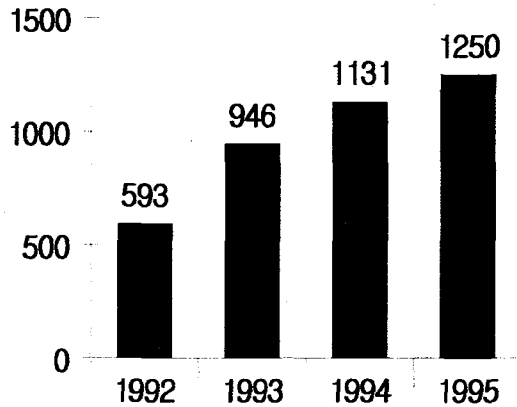
* 자료: 이창현, “한국언론의 통일 및 북한보도 분석,” 『저널리즘』 (1990 봄·여름), p. 114; 박형숙, “통일지향방송의 편성 확대를 위한 제언,” 『통일과 방송』, 한국방송프로듀서 연합회 주최 심포지엄 발표 논문 (1996. 9. 4).

** 사회교육방송은 제외하였음.

신문의 경우 정치나 경제 사회 등 일반 면에서 다룬 북한관련

기사를 제외하고 독립된 북한면에서 다루어진 기사 건수는 1992년 593건, 1993년 946건, 1994년 1131건, 1995년 1250건이며, 1996년에는 8월 말 현재 850건에 달한다(<그림 1> 참조).⁴⁶⁾

<그림 1> 북한면의 북한기사량 변화



이와 더불어 1989년 정부의 북한 정보 개방정책에 힘입어 KBS는 「남북의 창」을, MBC는 「통일전망대」를 고정 프로그램으로 편성하여 방송하고 있다.

신문을 중심으로 본다면 북한과 관련된 전체 기사의 양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는 북한·남북한·통일을 주제로 한 기사의 신문사별 분포인데 1994년도는 전년도

46)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중앙일보」, 「세계일보」 등 9개 신문의 경우이며, 자료는 「한국언론연구원」 데이터베이스 KINDS를 참고하였다.

<표 4> 신문사별 통일·북한 관련 보도의 연도 분포

연도 신문/주제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합계
조선일보	북한	1998	1930	2228	4177	10333
	남북한	536	597	356	535	2024
	통일	424	1065	1046	1440	3975
	합계	2958	3592	3630	6152	16332
동아일보	북한	2038	1914	2244	4321	10517
	남북한	591	720	373	681	2365
	통일	425	1072	912	1429	3838
	합계	3054	3706	3529	6431	16720
한국일보	북한	2087	1609	2080	4449	10225
	남북한	581	580	346	607	2114
	통일	439	1005	921	1585	3950
	합계	3107	3194	3347	6641	16289
중앙일보	북한	2140	1936	2058	3744	9878
	남북한	564	637	350	753	2304
	통일	459	1042	938	1420	3859
	합계	3163	3615	3346	5917	16041
한겨레신 문	북한	1573	1881	1969	3713	9136
	남북한	433	697	407	724	2261
	통일	418	1588	1200	1672	4878
	합계	2424	4166	3576	6109	16275

* 최선열, “통일에 관한 언론인들의 역할 인식,” 김정기 외,
「전후 분단국가의 언론정책」, p. 391.

에 비해서 두 배 가까이 기사 분량이 늘어났다. 보도 형태별로 보면 1993년을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뉴스, 사설 이외에 칼럼, 연재물, 좌담, 인터뷰, 스케치보도, 가십, 인물평, 통계, 용어 해설 등 다양한 형태의 북한 및 통일관련 기사들이 크게 증가되었다.⁴⁷⁾

<표 5> 전체 사설 중 통일 및 북한 관련 사설 비율(%)

월 신문	1	2	3	4	5	6	7	8	9	10	11	12	전 체
동93	5.6	7.4	11.3	4.9	7.8	6.8	10.3	5.0	5.2	12.5	10.7	10.3	8.2
아94	8.9	9.4	21.7	12.1	12.1	28.6	36.9	26.7	10.0	15.6	10.0	1.7	16.1
95	8.9	9.3	6.8	7.1	10.3	17.9	8.6	5.3	7.1	11.5	3.7	8.5	8.8
96	8.5	12.0	1.7	13.8	7.5	3.8	9.0						8.0
조93	3.7	7.3	9.8	8.8	11.7	12.5	6.9	1.7	8.6	7.1	7.3	14.0	8.28
선94	10.5	11.1	17.2	19.6	17.2	32.7	23.7	23.2	10.7	12.1	12.3	6.9	16.4
95	15.8	11.5	12.3	12.3	16.7	19.6	14.3	10.2	8.8	10.2	3.6	12.7	12.3
96	12.7	9.4	5.2	14.0	12.1	8.9	7.1						9.9
중93	7.4	7.2	5.0	0.0	6.8	5.5	5.1	3.6	3.8	6.9	15.8	7.1	6.2
양94	7.0	16.0	19.0	16.7	17.2	29.8	27.7	18.2	8.1	16.9	8.2	7.1	16.0
95	12.2	7.3	9.1	9.2	10.6	20.4	10.3	10.3	7.5	6.7	3.6	7.3	9.5
96	9.4	8.5	5.4	13.3	10.9	5.6	8.6						8.8
한93	6.7	3.7	8.3	5.3	8.6	12.1	1.7	5.2	1.8	12.5	8.9	12.1	7.2
겨94	8.1	11.1	14.5	9.8	11.7	27.6	32.2	18.3	22.6	16.1	7.0	8.8	15.7
레95	10.2	13.5	9.8	15.8	10.3	15.8	5.0	8.5	8.6	10.2	3.7	7.4	9.9
96	9.8	9.8	5.4	13.2	14.3	5.4	6.8						9.2
한93	5.8	9.1	9.5	5.2	6.3	15.8	10.2	3.6	3.6	8.6	10.7	10.3	8.2
국94	8.8	11.5	20.0	10.3	17.2	27.8	31.7	25.0	7.7	14.1	12.5	14.5	16.7
95	11.9	8.3	9.1	9.5	12.9	21.8	13.8	10.3	10.7	10.3	3.5	7.3	10.8
96	10.5	13.7	3.3	12.1	12.1	10.7	15.5						11.1

* 「한국언론연구원」 데이터베이스 KINDS에서 추출한 것임.

- 47) 최선열, “통일에 관한 언론인들의 역할 인식,” 김정기 외, 「전후 분단국가의 언론정책」, pp. 391~393.

언론에서 북한문제나 통일문제에 관심이 증대되었음은 신문 사설에서 북한 및 통일문제를 다루는 빈도 변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표 5>는 5개 일간지에서 1993년부터 1996년 7월 까지 전체 사설에서 북한 및 통일관련 사설의 빈도를 조사한 것이다. 신문사별로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평균 1주일에 한 번 꼴로 북한 및 통일관련 사설이 취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통일문제와 연관된 보도량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은 일차적으로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된 것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아울러 단순한 보도 이외에 칼럼이나 기획연재 등 다양한 양식의 기사가 늘어난 것도 전체적인 기사량 증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북한과 관련된 보도가 1994년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김일성의 사망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2. 통일문제에 대한 남한 매스미디어의 인식

가. 신문 사설에 나타난 통일 문제 인식

언론사의 공식적인 입장이 표현되는 것이 신문의 사설이라고 할 수 있다. 사설은 주제와 관련된 논설위원이 작성하지만 개인적인 의견이라기보다 문자 그대로 특정 사안에 대한 해당

언론사의 공식적인 견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통일과 연관된 사설의 분석을 통하여 통일문제에 대한 언론의 의식구조를 알아 볼 수 있다.⁴⁸⁾

(1) 사설의 주제

사설을 주제별로 정리한 것이 <표 6>이다. 주제별로 나누어 볼 경우 남북관계를 다루는 것이 전체의 29.5%로 제일 많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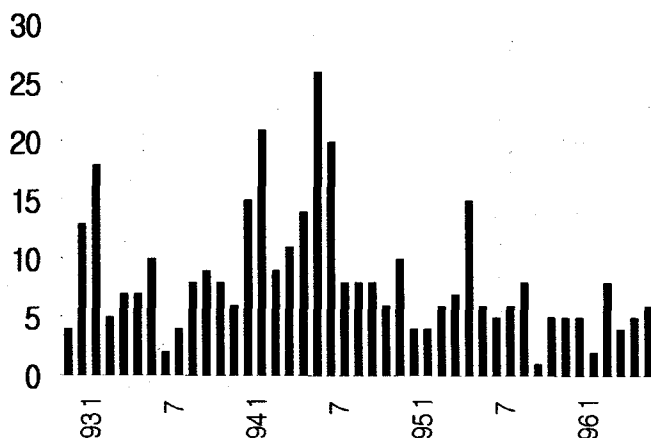
<표 6> 한국일보 통일·북한 관련 사설의 주제별 분류

주 제	비율(%)
남북관계	29.5
국제환경	24.3
북한내부	15.0
북한의 통일정책	14.2
남한의 통일정책	10.4
남한내부	6.6
정치	47.4
경제	9.1
군사	18.1
교류	10.8
기타	15.6

48) 분석대상으로 삼은 1993년도부터 1996년 7월까지 「한국일보」에 실린 통일 및 북한관계 사설은 총 283개이다. 그러나 내용 분석과 정에서는 중첩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복수 분류를 허용한 결과 개별 문항별로 총수는 가변적이다.

다음으로 통일을 둘러싼 국제환경에 대한 것이 24.3%, 북한 내부에 대한 것이 15.0%, 북한의 통일 정책에 대한 것이 14.2%, 남한의 통일정책에 대한 것이 10.4%, 남한 내부에 대한 것이 6.6%를 차지하였다. 분야별로는 정치분야에 대한 사설이 제일 많았으며(47.3%), 다음이 군사분야(18.1%), 교류분야(10.8%), 경제분야(9.1%)의 순이었다. 분야별로 사설의 주제를 보면 여전히 정치 문제가 통일문제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 통일·북한 관련 사설 양의 변화



통일 및 북한과 관련된 신문 사설 양의 전체적인 변화는 <그림 2>에 나타나 있다. 1994년 7월과 8월에 통일 및 북한 관련 사설이 급증한 것은 김일성 사망이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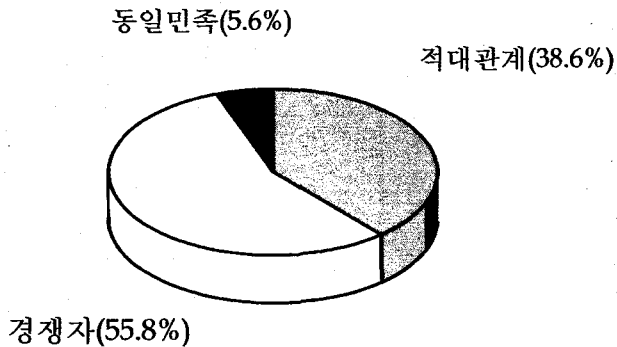
<표 7> 통일·북한 관련 사설 주제의 월별 변화

	남한내부	남한 대외정책	북한내부	북한 대외정책	남북관계	국제 환경	합 계
93년1월			1	1	2		4
2월			4	4	2	3	13
3월	1	3	1	4	6	3	18
4월			1	2		2	5
5월		1		3	1	2	7
6월	1	2	1	1		2	7
7월	2	3		1		4	10
8월	1			1			2
9월				2		2	4
10월				2	3	3	8
11월		2		1	2	6	9
12월		1	1	1	2	3	8
94년1월			1	1	3	1	6
2월	2			2	6	5	15
3월	1	2		4	9	5	21
4월		3		2	2	2	9
5월		1	2	2	4	2	11
6월	4	1		3	6		14
7월	4	3	13	1	4	1	26
8월	1	2	5	3	4	5	20
9월		3		1	1	3	8
10월	1	2	1		3	1	8
11월					5	3	8
12월			2	1	1	2	6
95년1월			1		6	3	10
2월				2	1	1	4
3월	2				1	1	4
4월					1	5	6
5월		2	2	1		2	7
6월		1			10	4	15
7월			1	1	4		6
8월	2	1			2		5
9월		2	1		2	1	6
10월			2	2	4		8
11월				1			1
12월			2		2	1	5
96년1월			2	1		2	5
2월	1		3			1	5
3월			1			1	2
4월	1		1	1	1	4	8
5월			3			1	4
6월		1			3		5
7월		2	3		1		6

있다. 이와 관련하여 통일관련 신문 사설의 주제가 월별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정리한 <표 7>을 보면, 김일성 사망

이전에는 상대적으로 북한의 대외 정책에 대한 주제가 많았으나(16) 김일성 사후에는 북한 내부에 관한 사설(43)이 증가하는 추세를 알 수 있다. 또한 1996년도에 들어 북한 내부를 주제로 한 사설이 빈번한 것은 식량난을 비롯한 북한의 위기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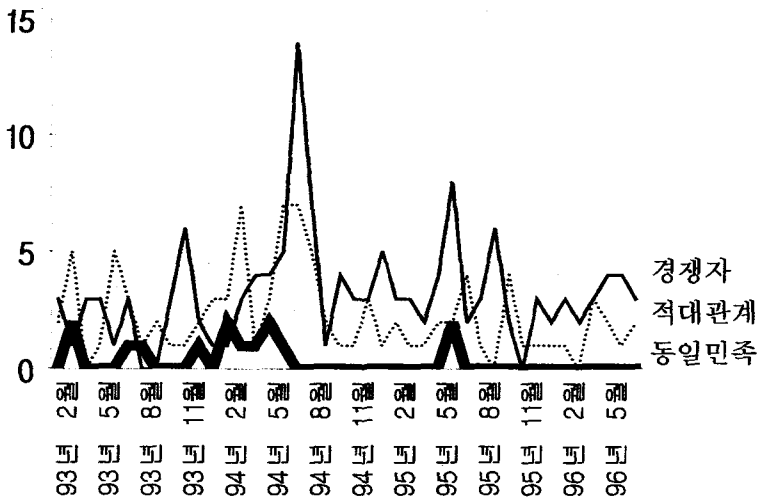
<그림 3> 북한에 대한 인식



(2) 북한에 대한 인식

신문사설에서 북한에 대한 인식 태도가 표명된 것은 총 251회에 이르렀다. 이를 분석한 결과 북한을 경쟁적인 관계로 보는 경우가 제일 많았다(<그림 3> 참조). 다음으로 북한을 적대적으로 보는 경우가 97회였으며, 동일 민족의 차원에서 북한을

<그림 4> 사실에 나타난 북한관 월별 변화



인식하는 경우는 14회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월별로도 크게 차이지지 않는다. <그림 4>는 사실에 나타난 북한관을 월별로 정리한 것으로서 시기에 상관없이 북한에 대한 적대감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김일성이 사망한 시점에서 경쟁자로서 보는 시각이나 적대적인 관계로 보는 시각이 빈번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정상회담 개최가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동일민족으로 보는 경우보다 여전히 경쟁자나 적대적인 관계로 보는 경향이 강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에 대한 신뢰감도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분석

대상 사설에서 신뢰감 여부가 표현된 경우가 250회 있었는데, 북한에 대한 불신을 표출한 경우가 192회에 이르렀고, 유보적인 입장을 표시한 경우가 58회였으며, 신뢰감이 표출된 사설은 한번도 없었다.

북한 체제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김일성이나 김정일 그리고 현재 김정일체제의 북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김정일체제에 대한 평가가 드러난 경우가 각각, 73회, 14회, 27회 있었으나 모두 부정적인 평가가 내려지고 있는 반면 유보적이거나 긍정적인 평가가 나타난 경우는 한번도 없었다.

북한의 변화 여부에 대해서도 분석대상 신문사설에서는 변하지 않았다는 견해가 대다수를 이루었다. 변화관이 표출된 사설은 총 147회였으나 이중에서 70%가 넘는 105회에 걸쳐 북한이 변하지 않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반면에 조금 변하였다는 견해와 많이 변하였다는 견해를 합쳐 북한이 변화하였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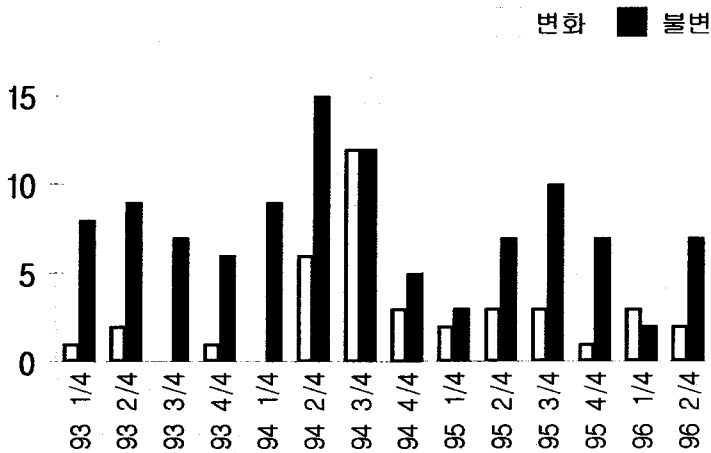
<표 8> 북한의 변화 여부

변화 견해	횟 수
많이 변화	2
조금 변화	40
불변	105

본 경우는 단지 42회에 불과하였다(<표 8> 참조). 북한의 변화 여부에 대한 판단을 분기별로 정리한 것이 <그림 5>로서 북한

이 변화하였다는 견해가 가장 많이 표출된 것이 94년도 3/4분기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김일성의 사망으로 북한의 변화가 불

<그림 5> 북한 변화에 대한 평가 변화



가피한 것으로 인식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 기간을 제외하고는 북한이 변화하지 않았다는 견해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3) 통일을 위한 조건

통일의 조건과 관련하여 사실에 언급된 경우는 총 118회에 이르렀다. 이를 정리한 것이 <표 9>이다. 통일의 조건과 관련하여서 남한보다는 북한에 대하여 언급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표 9> 통일의 조건

남한의 정치	안정	12
	개혁	0
남한의 경제	발전	0
	개혁	0
남한의 군사	강화	5
	감축	0
북한	체제안정	0
	체제변화	29
	개혁·개방	46
	군비감축	18
국제 환경	교차승인	8
	북한의 고립화	0

많다. 개혁·개방을 비롯하여 북한의 체제변화를 통일의 조건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북한의 군사력 감축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었다. 남한의 경우에는 정치적 안정을 지적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군사력의 강화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통일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경제적인 문제를 언급한 경우는 없었다. 북한을 국제적으로 고립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없는 반면, 북한에 대한 서방국가의 승인을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통일과정에서는 남한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강조된 사실이 총 145회로 시민사회와 정부와 공동으로 주도하여야 한다는 주장(2회)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았다. 또한 통일 방법으로는 단계적 통일을 지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10> 참조).

<표 10> 통일주도세력과 통일방법

통일주도	남한정부	145
	남한 민·관합동	2
통일 방법	단계적 통일	48
	흡수통일	0

(4) 주요 현안에 대한 언론사별 견해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최근에 논란이 되었던 쟁점 사항들에 대한 주요 언론사별 태도를 해당 사건이 야기되었던 시점의 사설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한 것이 <표 11>이다. 1994년도의 제네바 합의로 타결된 핵문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다. 「한겨레신문」은 다소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조선일보」는 신중한 입장을 취한 반면 다른 신문사들은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김일성 사후 조문 파동에 대해서는 「한겨레신문」을 제외한 전 신문이 김일성 조문에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⁴⁹⁾

1996년도에 이루어진 쌀 제공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견해가 많았다. 그러나 긍정적인 평가를 보이면서도 정부의 정책 결정과정이나 정책 수행 방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른 언론사와는 달리 「조선일보」는 북한에 대한 쌀 제공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같은

<표 11> 주요 현안에 대한 언론사별 입장

현 안	언론사	매우 긍정	다소 긍정	중립	다소 부정	매우 부정
제네바합의	한국일보				○	
	동아일보					○
	조선일보			○		
	한겨레신문		○			
김일성조문	한국일보					○
	동아일보					○
	조선일보					○
	한겨레신문		○			
쌀제공	한국일보	○				
	동아일보		○			
	조선일보		○			○
	한겨레신문		○			
	중앙일보		○			
		원조		조건부 원조	원조 반대	
수해원조	한국일보			○		
	동아일보			○		
	조선일보			○		
	한겨레신문	○				
	중앙일보	○				

- 49) 사실뿐만 아니라 일반 기사에 대한 분석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고 있다. 「한겨레신문」을 제외한 「한국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에서는 김일성 사망을 계기로 반공주의 이데올로기를 강력하게 개진하고 있다. 백선기, “보도와 이데올로기: ‘김일성 사망’ 신문보도에 대한 르불(Reboul)의 분석틀 적용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 「한국 언론 내용 분석론」 (서울: 나남출판, 1995), pp. 52~58.

해 가을 북한 지역의 홍수로 불거진 수해 원조 문제에 대해서 「한겨레신문」과 「중앙일보」는 원조를 찬성한 반면 「한국일보」와 「동아일보」 그리고 「조선일보」는 원조에 대한 조건을 강조하고 있다.

(5) 통일관련 사설의 분석 결과

통일과 관련된 사설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북한에 대해서 한국 언론은 보수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불신이 북한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태도이며, 북한을 하나의 민족이라기보다는 경쟁자나 적대적인 관계로 파악하고 있다. 북한의 변화 여부에 대해서도 대단히 비관적이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 국민들의 여론과도 다소 차이가 있다. 통일문제에 관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북한을 경제대상으로 보는 경우가 많았으며, 적대대상으로 인식하는 경우는 15.9% 정도에 불과하다. 또한 북한의 변화 정도에서도 많이 변하고 있다고 보는 사람이 9.5%, 약간 변하고 있다고 보는 사람이 38.7%로,⁵⁰⁾ 일반 국민들이 언론보다 북한에 대한 인식이 전향적이라고 볼 수 있다.

50) 민족통일연구원, 「1995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pp. 12~26.

둘째, 한국의 언론은 통일보다는 안보와 반공을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한국 언론이 반공이데올로기를 이념적 지평으로 삼고 있다는 평가로부터 벗어나지 않는데,⁵¹⁾ 사실 내용에서도 반공주의적인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⁵²⁾ 당시 일반 국민들이 조문 파동에 보인 태도에 비교해 보더라도 언론의 반공주의 성향이 상대적으로 더욱 강하다고 볼 수 있다.⁵³⁾

셋째, 정치나 체제 중심적인 차원에서 통일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단계적인 통합론을 제기하면서도 이의 전제조건이 되는 교류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반면, 남북관계, 정치나 군사 혹은 국제 환경과 같은 차원에 대해서는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독일이 통일 후유증으로 통일비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언론은 통일의 전제조건으로 남한 정치의 안정이나 북한 체제의 변화를

51) 김민환·김원태, “남·북한총리회담 보도 사례분석,” 『신문연구』 (1990 겨울), pp. 92~112; 김기태, “통일관련 기사의 보도경향과 과제,” 『저널리즘』 (1989 봄·여름), pp. 90~106.

52) 김일성은 “6.25의 도발범”이며 (『한국일보』, 1994. 7. 13 사설), 북한은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다(『동아일보』, 1994. 7. 13).

53) 1994년의 9월에 시행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일성의 사망에 대해서 “조의를 표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45.1%, “적당 수준의 조의를 표해도 된다”라는 응답이 54.9%였다. 경향신문·대륙연구소, “‘남북관계·북미회담’ 여론조사 (1994. 9),” 『경향신문』, 1994. 10. 6.

강조하고 있으나, 남한의 경제·사회적 통일 대비 문제에 대해서는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넷째, 북한이나 통일문제에 대한 관점이 일관적이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사실이 본질적으로 사건에 대응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는 하나 사건의 유무에 따라 북한관이나 통일정책에 대한 견해가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북한관의 변화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비판적이라는 특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북한의 체제위기에 따라 남한의 통일환경 변화와 같이 언론의 북한관에 변화를 줄 수 있는 합리적인 요인보다는 김일성의 사망, 쌀문제 등 개별적 사안에 따라 언론의 북한관이 좌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 통일관련 언론인의 의식 정향

일반적으로 매스미디어에서 기자 등의 전문가가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이야기하지만,⁵⁴⁾ 특히 북한이나 통일에 관련된 보도는 근본적으로 기사를 작성하는 보도주체의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다음의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통일문제가 기본적으로 이념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54) Pamela J. Shoemaker & Stephen D. Reese, *Mediating Messages: theories of Influences on Mass Media Content*, pp. 105~106.

분단이 이념적 차이에 의해서 비롯되었듯이 통일도 이념의 문제와 분리될 수 없다. 따라서 통일문제를 다루는 기사나 보도도 이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결과적으로 기사 작성 주체의 이념과도 무관할 수 없다는 점이다. 통일에 대한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어떠한 통일을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가하는 개인적인 취향이나 개인이 속한 조직의 이념적 지향성 그리고 사회주의 및 자본주의에 대한 견해, 민족주의적 성향이 통일과 관련된 기사에 투영되는 것은 당연하다

둘째, 북한에 대한 보도는 보도대상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접촉할 수 없다는 점에서 다른 보도와는 본질적으로 차이를 가지고 있다. <표 12>는 각 언론사의 통일원 출입기자 및 통일 문제 담당 논설위원을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에서 통일관련 기사의 정보원을 밝힌 것으로서 주요 정보원이 간접적임을 알

<표 12> 통일관련 언론인의 주요 정보원

정부 당국자	신문· 잡지·보도	민간인	학자· 연구기관	귀순 자	남북한의 발표문	외국 대사관	동료 기자
17	7	5	5	1	1	1	1

* 조사 대상인원 총 20명에 중복응답을 허용하였음.

수 있다. 이와 같이 대부분 기사의 정보원이 간접적인 것은 근본적으로 북한에 상주하는 특파원을 두거나 독자적인 취재원을 두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 및 통일관련 보도는 대부분 사실보도라기보다는, 일종의 해설보도라고 보아

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어떠한 자료를 중시하고 주어진 자료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보도주체의 편향이 기사의 성격을 좌우할 수 있다.

통일관련 언론인들은 스스로가 통일문제에 대한 언론의 영향

<표 13> 통일문제에 대한 언론의 영향력

매우 영향이 크다	다소 영향이 크다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영향이 거의 없다
9명	9명	2명	0명

* “현재 한국의 언론은 통일문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

** 조사 대상: 통일관련 논설위원 및 통일원 출입기자 20명

력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다(<표 13> 참조). 영향력이 크다고 대답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어떤 부분에 특히 영향력이 큰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11명이 통일문제 및 북한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여론의 향방을 정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한다고 대답하였고, 다음으로 6명이 통일정책을 입안·집행·평가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⁵⁵⁾

55) 시기와 대상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언론인 1024명을 대상으로 한 최선열의 통일관련 여론조사에 따르면 “언론은 정부의 정책을 수용한다”는 의견에 동의한 사람은 전체의 12%에 불과하지만, “언론이 대북정책을 주도하여야 한다”는 응답이 68%나 된다. 최선열, “통일에 관한 언론인들의 역할 인식,” 김정기 외, 「전후 분단국가의 언론정책」, p. 399.

언론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북한관련 보도의 객관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통일원 출입기자 및 외신부의 관련 기자 71명을 대상으로 한 김정택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언론의 북한보도가 독자나 시청자에게 북한의 실체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기자들 스스로가 100점 만점

<표 14> 통일 및 북한관련 보도 분야별 평가

	매우 잘함	다소 잘함	다소 못함	매우 못함
북한의 실상 보도	1명	5명	11명	3명
남북한 주민간 이질감 해소			15명	5명
통일의욕 고취		3명	13명	4명
정부의 통일정책 전달	4명	12명	4명	
남한의 각종 통일운동 보도		5명	10명	5명
민족화합		1명	16명	3명
통일에 대한 국제적 환경		5명	12명	3명

에 평균 57점의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⁵⁶⁾ 이와 관련하여 통일원 출입기자와 관련 논설위원의 북한 및 통일관련 보도의 분야별 평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표 14>이다. 전반적으로 조사 대상 언론인들은 북한관련 기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남북한 이질감 해소에는 조사자 전원이 문제가

56) 김정택, “언론인의 북한관 및 통일관,” 김정택 외, 『남북통일과 언론』, p. 36.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에 정부의 통일정책 전달 기능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언론인들은 북한관계 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 원인을 자료부족이나 정부기관의 정보 독점 탓으로 돌리고 있다. 김정택의 조사에서는 북한 보도에서 불공정성을 지적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의 24.2%였는데, 오보 원인의 첫째로 ‘뉴스원 측의 고의에 의한 부정확한 정보제공’을 꼽은 비율이 전체의 55.3%였다. 다음이 ‘기자의 부주의’(10.5%), 및 ‘기자의 전문성 결여’(10.5%), ‘언론매체간의 지나친 경쟁’(9.2%)의 순이었다. 그리고 ‘기자의 고의적 날조’라고 응답한 사람도 5.3%나 되었다.⁵⁷⁾

통일원 출입기자 및 통일관계 논설위원들도 이와 비슷한 의견을 갖고 있다(<표 15 참조>). 북한 보도의 문제점으로 기사의 부정확성, 정형화되고 획일적인 기사, 선정적이고 과장된 보도, 편향된 시각에 의한 일방적 보도 등을 지적하면서도 통일관련 보도의 문제를 당국자 자료제공 미흡 및 인식 부족 등 정부의 탓으로 돌리거나, 직접 취재의 불가능함, 취재원 및 정보원의 보신주의 등 외부 조건의 한계로서 설명하고 있다. 반면에 기자의 자질 문제나 언론사의 문제를 지적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와 같은 내용이 잘 드러나는 것이 언론인

57) 위의 글, p. 40.

들의 기사 작성시 애로사항을 정리한 다음의 <표 16>이다. 기사작성 과정의 애로사항 중 정보독점과 이로 인한 자료 부족

<표 15> 통일관련 보도의 문제점과 그 원인

평 가	원 인	응답자
기사의 부정확성 및 신뢰성 부족	◦ 정부의 비공개적 태도 ◦ 사실확인불가능 ◦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정부의 태도 ◦ 남북한 정부의 왜곡된 발표	6
정형화된 보도	◦ 정부의 발표 전제 ◦ 외신보도 전제 ◦ 북한을 지나치게 특수화 ◦ 객관적 측면보다 주관적·이념적 관점 부각 ◦ 기자의 식견부족 ◦ 당국의 미흡한 자료제공 ◦ 기자의 판단보다는 지배층 이익을 우선시	5
선정주의·한견주의 보도	◦ 정부 발표에만 의존 ◦ 당국자의 허위발표 ◦ 언론사간의 과잉 경쟁 ◦ 북한문제의 상업화	5
추측보도	◦ 지나친 보안의식 ◦ 비밀주의를 고수하는 취재원의 문제 ◦ 기자의식 결여	3
분석기사 부족	◦ 전문가 조언 및 취재원 부족	1

을 든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10), 다음이 확인 가능한 취재원이 없음(9), 당국의 보안 및 보신주의를 이유로 든 경우가 그 뒤를 이었다(6).

통일과 관련된 언론인들은 전반적으로 북한이나 통일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 통일원 출입기

자나 관련 논설위원의 경우 통일문제를 다룬 경험이 전혀 없다는 경우가 조사 응답자 20명 중 4명이었으며, 통일문제를 다

<표 16> 기사 작성시 애로사항

정부기관의 정보독점	10
확인 가능한 취재원 없음	9
당국의 보안 및 보신주의	6
비판위주의 기사 작성 요구	1
세부적인 실사에 접근 어려움	1
통일논의의 확실성	1
북한에 대한 부정적 시각	1
정보 입수의 시간적 지체	1
합계	30

*20명의 응답자에게 중복 질문 허용

룬 기간이 6개월에서 1년 이하가 6명, 1년에서 2년 사이가 3명, 2년에서 5년 이하가 4명, 10년 이상은 3명이었다. 논설위원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북한 및 통일관련 기자의 전문성은 거의 없다고 보아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북한부 기자 및 외신부 기자를 포함한 김정택의 조사에서도 스스로가 북한 전문기자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전체의 16.4%에 불과하다.⁵⁸⁾

통일관련 논설위원 및 통일원 출입기자에게 현정부의 통일정책을 평가하여 달라는 질문에 대하여 조사 대상자 대부분이 통일정책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표 17> 참조). 특히

58) 위의 글, p. 24.

<표 17> 통일정책의 평가

평가	원인	응답자
통일정책의 일관성 결여	◦ 정부의 통일에 대한 신념·철학 결여 ◦ 국민적 합의 부족 ◦ 통일문제의 국내 정치 이용 ◦ 가변적인 대내외적 환경 ◦ 통일원의 권한 미약 ◦ 잦은 개각과 비전문가 통일정책 담당 ◦ 책임소재 불분명 ◦ 대통령의 개인적 정책 결정 ◦ 밀실정책 ◦ 북한의 태도 ◦ 미국 등 국제적 이해의 영향	9
통일철학과 장기적이고 전략적 사고 부족	◦ 단기적 업적과 인기에 몰두 ◦ 최고 정책담당자들의 무지 ◦ 전문가 양성 소홀 ◦ 대통령의 소신에 절대적 의존 ◦ 정보부족과 담당관료의 잦은 교체 ◦ 통일정책을 개인인기와 결합 ◦ 정부내 진보파와 대북관료와의 갈등	9
수세적인 통일정책: 북한 실정에 대한 고려 부족	◦ 북한에 대한 자신감 결여 ◦ 기업 등 민간 부분의 자율성 불인정 ◦ 상황심리에 의존하는 경향 ◦ 대북 경험의 무원칙성	4
정부차원의 이익만 추구	◦ 남북한 국민들의 이해 무시	1

* 조사 대상자 20명을 대상으로 주관식 응답.

통일정책의 일관성 부족(9명)과 통일 철학 및 장기적이고 전략

적인 통일정책의 부재(9명)를 지적한 경우가 많았으며, 다음으로 수세적인 대북정책(4명), 정부 이익 우선의 통일정책(1명)을 비판하고 있다. 통일정책의 문제점이 파생된 원인으로는 최고 통치자에 의존하는 정책결정과정, 통일정책의 국내정치에로의 피종속, 정책담당자의 잦은 교체, 전문가의 부족, 정부내 강경파와 온건파간의 갈등, 대외변수의 영향, 북한에 대한 자신감 부족 등을 지적하고 있다.⁵⁹⁾

언론인들은 통일과정에서 언론이 수행하여야 할 기본적인 역할에 대해서 북한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소개하여 북한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교정하고, 북한주민에 대한 동포의식을 확산하고 북한체제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며, 남북한 주민간 적대감 완화 및 상호이해 증진을 추구하여야 한다는 등 민족의 이질화 및 동질성 회복을 가장 중시하고 있다(<표 18> 참조). 다음으로는 올바른 대북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북한실상을 정확히 보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과 통일과정의 어려움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인식시켜야 하는 것이 언론의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인식하는 언론인이 많았다.

정부와 언론의 관계에 대해서는 통일관련 논설위원들과 통일

59) 현 정부의 통일정책에 관해서 언론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93.4%가 불만을 표시할 정도로 대단히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최선열, “통일에 관한 언론인들의 역할 인식,” p. 404.

원 출입기자들은 정부와 언론이 신뢰구축을 통하여 상호보완

<표 18> 통일과정에서 언론의 기본적 역할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보도	11
정확한 북한 실상 보도	7
통일과정의 어려움 교육	6
민족통일의 비전제시	3
통일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3
통일분위기 조성	3
국론통합	3
정부의 통일정책 홍보	2
통일국가의 정책방향제시	2
국익보호	1
북한에 대한 불필요한 보도 자제	1
통일대비책 수립 및 검증	1
한건주의식 정책 비판	1

* 응답대상 20명에게 주관식 질문

적 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이나(20명 중 12명), 정부의 언론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변화를 요구하는 의견도 적지 않았고(5명), 상호보완적 관계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정부의 태도 변화가⁶⁰⁾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다수였다.

통일과 관련된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서 통일 관련 논설위원 및 통일원 출입기자의 견해를 정리한 것이 <표 19>이다. 정치

60) 조사대상자들의 정부에 대한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았다: 언론을 파트너로 인식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요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남북관계 진행상황을 수시로 브리핑하여야 한다. 목적성을 가지고 언론을 대북정책에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취재의 자유 및 기사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한다.

<표 19> 주요 관심사에 대한 언론인의 견해

보안법	존속	6
	폐지	4
	조건부폐지	4
	개정	4
	점진적 폐지	2
한총련	대체로 반대하며 한총련 변화 유도	8
	이적단체이므로 강경대응	7
	정부의 대국적 대처	5
민간기업의 경협	확대 및 자유화	12
	조건부 허용	5
	점진적 추진	3
대북 식량지원	전폭적인 지원	6
	조건부 지원	6
	민간차원의 지원	5
	최소한 지원	2
	무응답	1
4자회담	적극추진	8
	실현가능성 없음	6
	추진하되 연연하지 않음	3
	다른 방식 모색	2
	전제조건화 반대	1
시민사회 통일운동	활성화 모색	10
	자율적인 정리 필요	3
	일정 범위 내에서 추진	2
	통일문제에 도움이 안됨	1
	무응답	4
남북한 언론교류	활발한 추진	9
	조건부 찬성	4
	소극적 추진	4
	실효성 없음	3

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보안법 문제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현행대로 존속’하여야 한다는 의견(6명)과 ‘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4명)을 보안법 유지로 보고, ‘폐지’(4명), ‘조건부 폐지’(4명), ‘점진적 폐지’(2명)를 보안법 폐지의 의견으로 다시 범주화한다면 양쪽의 의견이 대등하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한총련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 전반적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나(‘엄벌’ 7명, ‘대체로 반대’ 8명), 정부의 대국적인 대처 방안을 주장하는 의견도 어느 정도 있다(5명)고 볼 수 있다.

민간기업의 남북 경험에 대해서는 ‘남북한 관계개선에 기여하므로 확대하는 동시에 자율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12명). 다음으로는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 정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거나 ‘점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1995년부터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는 대북 식량지원에 대해서는 ‘전폭적 지원’(6명), ‘조건부 지원’(6명)을 지지하는 의견이 많았고, 다음으로 ‘민간차원의 지원’(5명)을 찬성하였으며 ‘최소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적었다(2명).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4자회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으나(8명),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견해도 적지 않았다(6명). 시민사회의 통일운동에서는 ‘조건부 찬성’이나 ‘자율적인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포함할 경우 지지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반면(15명), 반대하는 입장은 소수에

불과하다(1명).

통일과 관련된 언론인들의 의식구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볼 수 있다.

첫째, 정부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이라는 점이다. 최선열의 언론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나 김정탁의 북한부 및 외신부 기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그리고 필자가 통일관련 논설위원 및 통일원 출입기자를 상대로 한 조사에서 대다수의 조사대상 언론인은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다. 비판의 근거는 해당 언론인이나 회사가 지니고 있는 정치적 정향에 따라 다르기는 하였지만,⁶¹⁾ 기본적으로 통일정책의 일관성이나 철학문제와 같이 근본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언론인들은 심지어 “통일에 있어서 큰 장애물은 정부이다,” “통일논의가 정권적 차원에서 다루어진다”라는 의견에 동의하기도 한다.⁶²⁾ 4자회담, 보안법 문제, 한총련에 대한 대응, 창구일원화 문제 등 통일과 관련된 쟁점사항에 대해서도 언론인들은 정부의 공식적 입장과 배치되는 경향이 있다.⁶³⁾

61) 예를 들어 진보적인 경향의 언론인은 대북정책이 강경하다는 차원에서 문제를 삼는 반면, 보수적인 경향의 언론인들은 안보적인 차원에서 통일정책의 문제를 제기한다.

62) 김정탁, “언론인의 북한관 및 통일관,” p. 44.

63) 북한부 및 외신부 기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보안법 존속이 통일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고, 남북한 교섭창구가 정부로 일원화되는 것이 통일 여건 조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다소 많았다. 위의 글, p. 45.

둘째, 통일관련 언론인들은 이중적인 의식구조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통일정책에 대해서는 비판적이고, 통일정책에서 언론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자신들이 작성하는 보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고, 정부 정보원의 정직성에 대해서 회의하면서도 자신들의 보도 중에서 정보의 통일정책 전달기능에 대해서는 가장 후하게 평가하고 있다. 통일과정에서 언론이 수행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로 민족동질성 회복을 꼽고 있으면서도 현단계 언론보도에서 남북한 주민간 이질감해소에 관한 내용에 대한 평가가 가장 부정적이다.

셋째, 통일관련 언론인들은 전반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⁶⁴⁾ 북한에 대해서 보다 강력한 정책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으나, 보안법 문제나 식량지원, 경제 및 시민사회 통일운동에 대해서 현재의 정부 정책보다 전향적인 의견이 많다. 또한 한총련에 대해서도 정부보다는 상대적으로 유화적인 대처 방안을 요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앞에서 분석하였듯이 통일관련 사실들이 대부분은 보수적인 논조를 갖고 있고, 주요 쟁점에 대한 언론 보도들이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는 점과도 꺾리되는 현상이라

64) 언론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자신의 이념적 성향을 구분하라는 질문에 좌파가 10%, 중도가 85%, 우파가 5%였다. 최선열, “통일에 관한 언론인들의 역할 인식,” p. 395.

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야기되는 것은 기사를 작성하는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소신에 의해서 기사를 작성하기보다는 언론사의 편집진이나 경영진의 의견을 수용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3. 통일문제에 미친 남한 매스미디어의 영향

남한의 매스미디어는 통일문제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방송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신문이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다. 방송의 경우 일주일의 하나 정도의 고정 프로그램을 편성하거나 아예 고정 편성이 없는 방송사도 있는 반면, 신문은 일정 양의 통일 및 북한 관련 기사를 고정적으로 편성하고 있다. 그러나 1980년대까지 통일문제를 다루는 고정적인 기사가 신문이나 방송을 막론하고 거의 없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1990년대 이후에 들어서서 남한의 매스미디어는 본격적으로 통일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매스미디어는 다음의 몇 가지 점에서 통일문제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첫째,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켰다고 볼 수 있다. 언론사가 북한부나 북한팀을 신설한 이후 편성된 통일관련 고정면은 남북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당시 남북관계의 진전과 맞물려 국민들이 북한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통일의 필요

성을 인식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방송 초기의 「남북의 창」이나 「통일전망대」는 높은 시청률을 확보하면서⁶⁵⁾ 그 동안 관심 밖의 대상이었던 북한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북한이나 통일문제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북한의 상황이나 통일환경은 급속하게 변환 반면, 일반 국민들은 기존의 반공교육 이외에 새로운 통일교육을 받지 못하였다. 또한 북한의 폐쇄적인 체제 특성상 일반인들이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접촉할 수 없는 여건에 처해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일반시민들은 매스미디어의 적극적인 통일관련 보도를 통하여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정보와 통일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접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정부의 통일정책을 홍보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는 점이다. 변화하는 통일환경에 부응하는 동시에 북한의 고려 연방제 통일방안에 대응하여 남한의 통일정책도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변화하여왔다.⁶⁶⁾ 언론인 스스로가 가장 긍정적으로

65) 1992년도 여론조사에서 KBS의 「남북의 창」이나 MBC의 「통일전망대」에 대한 시청 여부를 물어 본 질문에 가끔 본다는 사람이 57.8%, 자주 본다는 사람이 26.8% 그리고 정기적으로 본다는 사람이 5.9%였다. 민족통일연구원, 「1992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결과」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2), p. 36.

66) 전두환 정권 시절에서는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노태우 정권에서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수립되었고, 현 정부에서는 「3단계 3기조 통일방안」을 이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채택된 바

평가하는 통일관련 보도가 정부의 통일정책 홍보라는 점에서 도 알 수 있듯이 매스미디어는 변화하는 통일정책을 충실하게 국민들에게 전달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의 통일관련 보도는 몇 가지 점에서 중요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

첫째, 보도 자체에 대한 신뢰감이 없다는 점이다. 통일관련 언론인도 통일관련 보도의 신뢰성에 대해서 낮게 평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통일관련 보도에 대한 신뢰성이 높지 않다.⁶⁷⁾ 통일관련 보도에 대한 불신은 일차적으로 언론 일반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에서 연유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기존의 통일관련 보도에서 오보나 과장 보도가 적지 않았다는 점도 불신감 증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⁶⁸⁾ 오보나 과장보도는 현실적으로 정보원의 부족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제가 부족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불확실

있다.

67) 1994년도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우리 언론의 북한에 관한 보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신뢰한다는 응답이 57.2%였으나(다소 신뢰 51.3%, 매우 신뢰 5.9%), 신뢰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33.2%나 되었다. 민족통일연구원, 「1994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결과」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p. 35.

68)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성혜림 망명설’ 등이 예가 될 수 있다. 또한 통일관련 보도의 대표적인 오보로 ‘김일성 사망설’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종수·윤석년, “통일에 관한 보도경향,” 「신문연구」 (1990 여름), pp. 70~91 참조.

한 내용을 선정적으로 보도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상업적 이익이나, 정치적 의도에서 유발된 과장보도도 적지 않다고 볼 수 있다.⁶⁹⁾

통일관련 보도에 대한 불신은 일차적으로 정부의 통일정책 홍보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부의 통일정책이 올바르게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않을 경우 통일정책 수행에 추동력을 얻을 수가 없다. 그리고 통일정책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이 가열될 수 있고, 통일이나 북한 문제에 대한 정보를 다른 방법으로 취득하려고 시도하거나 ‘유언비어’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준다.

둘째, 반공주의 이념이 지나치게 압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향은 앞의 사실 분석에서 제기된 바 있으나 방송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다. 일반적인 보도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드라마의 경우도 반공주의 경향의 작품이 중요시되어 왔다. KBS에서 1964년부터 1975년까지 지속되었던 ‘실화극장’이나 1984년의 ‘지금 평양에선’은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이해보다 일방적

69) 북한관련 오보 중에는 실수에 의한 단순한 사실착오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김일성 광장’을 ‘김일성 경기장’으로, ‘비서’를 ‘서기’로 보도한 경우이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1994년도 7월 20일자 어느 신문이 내외통신이 보도하지 않은 내용을 내외통신 기사 속에 넣어 김일성 추도식 예고 기사를 보도한 것은 고의적인 오보라고 볼 수 있다. 구종서, “남북한 통일관련 보도의 현황과 과제,” 김정기 외, 「전후 분단국가의 언론정책: 독일의 동방정책과 한국의 북방정책 비교 연구」, p. 471.

인 비판이 핵심을 이루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MBC '113 수사본부'나 '3840 유격대'로 이어졌다.⁷⁰⁾

전쟁의 경험, 북한의 현실적인 위협 그리고 안보 문제를 고려한다면 지금까지 남한의 매스미디어가 반공주의적인 이념 정향을 보여온 것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남한 매스미디어의 반공주의는 권위주의적인 군사통치 시절의 지배집단의 맹목적 반복이데올로기를 추종한 경향이 없지 않다.⁷¹⁾ 이러한 경우 통일문제에 다양한 사회집단의 의견이 상대적으로 무시되어 여론 형성과 국민적 합의 도출이라는 매스미디어의 본질적인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셋째, 획일적인 보도 성향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일종의 '유니폼식 보도' 성향으로서 어느 날 갑자기 북한에 관한 부정적 기사가 신문과 방송에 동시에 발표되며 그 내용과 제호까지도 거의 비슷하게 게재되기도 한다.⁷²⁾ 일상적인 신문의 북한면이

70) 한국의 수사드라마에서는 도둑을 잡은 숫자보다 간첩을 잡은 숫자가 많다고 할 정도이다. 1990년대 들어 '지리산,' '역사앞에서,' '해빙' 등 상대적으로 통일지향적인 드라마가 제작되었지만 극히 예외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최상식, "통일(분단) 소재 드라마의 평가와 전망,"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창립 9주년 기념 심포지엄, 「통일과 방송」 발표 논문 (1996. 9. 4).

71) 원우현, "남한언론매체와 한국의 통일," 「미 사회과학협의회 학술대회」 발표 논문 (1990. 11. 17). 박기순·전리령, 「한국신문에 반영된 북한 '이미지」 (서울: 소화, 1995), p. 36에서 재인용.

72) 이종수·윤석년, "통일에 관한 보도 경향," p. 75.

나 북한관련 방송 프로그램도 구성이 대동소이하다. 심지어 공식회담을 수행하여 북한에 들어갔던 취재기자들의 방북기도 비슷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⁷³⁾ 또한 다루는 주제에 있어서도 정치적인 차원에 편중되어 있다.

획일적인 보도 성향은 일반 시민들의 관심을 저하시켜 결과적으로 통일운동의 확산을 저해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이념적 편향성과 결합되어 민족동질성 회복과 공동체 형성을 추구하거나, 한반도의 비핵화 및 평화정착 문제와 같이 중요한 논의도 상대적으로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지나친 상업주의와 선정주의이다. 무한 경쟁의 언론 풍토가 북한관련 보도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특히 취재원이 제한적인 상황하에서 상업주의적인 발상은 자극적인 보도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오보나 과장보도를 통해서라도 국민들의 관심을 끄는 것을 추구한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김정일의 스캔들에 대한 보도가 대표적인 예가 된다. 이러한 보도경향은 김정일의 지도력이나 김정일체제의 안정성 여부의 문제와 같이 합리적으로 북한을 생각하게 만들지 않고 김정일에 관한 스캔들에만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여 북한체제를 희화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북한을 필요 이상으로 자극하여 남북

73) 박정순, “취재원 제한으로 보도내용 획일화, 고정관념 못 깨고 부정적 측면 강조,” 「신문과 방송」 (1990. 12), pp. 31~38.

한 정부간 대화나 접촉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 다른 차원에서 지나친 상업주의는 상업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통일과 관련된 부서나 보도를 축소시켜 통일과 관련된 장기적인 기획을 불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다.⁷⁴⁾ 그리고 남북한 관계의 진전을 현실 이상으로 과장하여 국민들의 기대감을 증폭시켰다가 실망시켜 궁극적으로 통일에 대한 회의감을 확산시키는 것도 선정주의적인 보도의 또 다른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남한 매스미디어가 통일관련 보도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취재가 불가능하다는 남북한 대치 상황에서 원인을 찾아 볼 수 있다.⁷⁵⁾ 이와 아울러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이 통일관련 보도의 문제를 야기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첫째, 통일관련 언론인들의 자질 문제를 생각할 수 있다. 앞

-
- 74) 상업주의에 위축되는 통일관련 보도의 현실은 순수 상업방송인 SBS의 TV나 라디오 어느 매체에도 통일관련 프로그램이 없는데서 극명하게 알 수 있다. 그리고 대표적인 통일방송 프로그램인 「남북의 창」이나 「통일전망대」의 편성이 소위 시청률이 낮은 시간대로 표류하고 있는 것도 상업주의 경향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 75) 동구권이 개방된 이후 동구권에 대한 다양한 보도가 시도되어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끌었을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의 실체적인 진실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김원용, “텔레비전 시청과 공산권 국가 인식 및 태도에 관한 연구,” 「신문학보」, 24 (1989. 5), pp. 193~209.

에서 살펴보았듯이 대부분의 통일문제 담당기자들은 통일문제를 다룬 경험이 일천하다. 또한 스스로도 북한 전문기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으며, 심지어 북한부에 발령 받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도 있다고 한다.⁷⁶⁾ 자기 소속감도 결여되어 있고 북한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새로운 취재원을 개발하기보다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할 가능성이 크다. 통일관련 기자의 자질 문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보다는 구조적인 차원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언론사 내부에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으며, 북한부가 설치되어 있는 언론사의 경우에도 인원이 제한되어 있다.⁷⁷⁾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통일문제와 관련된 수많은 기사량을 소화하여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충족시키기도 어렵고, 기자들의 전문화를 추구하기도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언론외적인 제약요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통일문제에

76) 북한부에 소속된 기자의 절반 가량만이 스스로 북한부를 선택하였다고 말하고 있으며, 희망여부에 관계없이 북한부의 일에 만족하는 경우도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김정탁, “언론인의 북한관 및 통일관,” pp. 13~23. 북한부가 인기가 없는 것은 일차적으로 북한부가 기자들이 선호하지 않는 내근 부서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김정탁, “북한부 취재보도의 문제점,” p. 145.

77) 비교적 북한부가 충실하다는 「중앙일보」의 경우도 부장 1명, 차장 1명, 그리고 기자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남한과는 근본적인 조건이 다르지만 북한의 경우 「로동신문」의 남조선부는 인원이 1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편집국의 핵심적인 부서라고 한다. 안춘옥, “북한 언론의 남한 보도,” 김정탁 외, 「남북통일과 언론」, p. 161.

대한 언론 보도의 경우 그것이 언론활동의 대상으로 삼는 실체는 곧 체제 자체의 문제와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의 통제로부터 언론이 근원적으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언론이 북한의 주요 인사와 인터뷰를 하고 이를 기사화 했을 때 국가보안법상의 찬양고무 조항과 연계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언론사 내의 자율규제가 존재하고 있으며, 국가보안법 이외에 ‘북한 및 공산권 국가에 대한 보도요강’과 같은 각종 보도지침의 제약을 받기도 한다.⁷⁸⁾

북한관련 보도의 가장 중요한 정보원인 내외통신의 문제도 외적인 제약 사항의 또 다른 예가 될 수 있다. 보도에서 가장 중요한 속보성의 차원에서 본다면 내외통신의 기사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김일성이 행사일에 연설을 했으면 그것이 당일에 해설과 더불어 즉각 보도되어야 하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보도된다.⁷⁹⁾ 일반 언론

78) 북한 및 공산권 국가에 대한 보도요강은 1988년 9월 10일부터 시행되었다. ○ 북한 및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거나 정부의 대북한 정책에 역행하는 여론을 조성하는 사항, ○ 남북한 인사의 정치적·외교적인 비공식적 접촉, 교류 등 미공개 사항, ○ 정부 차원의 공산권국가와의 정치·외교·경제와 관련된 비공식 교류에 관한 사항 등은 언론사가 자율적으로 보도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춘옥, “남북한 언론보도의 제문제,” 김정탁 외, 『남북한 통일과 언론』, p. 185.

79) 김정탁, “남한 언론의 북한 보도,” 김정탁 외, 『남북한 통일과 언

사가 취득할 수 있는 북한의 「로동신문」 등도 보름 가까이 지난 것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통일관련 보도가 획일적이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다.

제Ⅳ장 통일을 향한 매스미디어의 과제

1. 통일을 향한 매스미디어의 환경 조성

통일을 단계적으로 이룩한다는 차원에서나 급작스러운 통일을 대비한다는 차원에서도 민족구성원들이 통일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통일을 준비하는 자세를 갖추는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통일에 관한 정보를 객관적으로 제공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결집하여 통일정책 수립의 토대를 제공할 수 있는 매스미디어의 역할은 통일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에도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역할을 현재의 남한 매스미디어가 수행하기에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적지 않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통일문제에 매스미디어가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매스미디어 내외의 조건을 전면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첫째, 남한 언론이 갖고 있는 이념적 폐쇄성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 반공주의 일변도의 이념적 지형으로서는 다양한 통일논의가 수용될 수 없다. 현대사회의 다원화 현상이나 세대간의 의식격차의 확대는 통일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⁸⁰⁾

80) 통일논의에 대한 세대간 의식 격차에 대해서는 이우영, 「통일문제에 대한 세대간 갈등 해소 방안」(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참조.

그리고 올바른 통일정책의 수립과 이의 추진을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집단간의 여론 수렴이 불가피하다. 또한 북한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북한과의 사회문화적 통합을 위해서 북한 지배층이 아닌 북한 일반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남한 언론의 반공주의 일변도의 이념적 성향은 도리어 통일논의의 취합보다는 분열을 자극할 여지가 많다. 또한 남북한간의 의미 있는 교류를 확대하는데 도움이 되기보다는 남북한간의 단절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⁸¹⁾

반공주의만을 강조하는 이념적 지형하에서는 다양한 의견의 취합을 기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비정상적인 통일운동이나

81) 북한은 남한의 매스미디어가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남한의 매스미디어를 남북한 교류의 장애물로 인식하고 있다. 1990년 10월 북한 선수팀과 서울을 방문한 북측 스포츠국가위원회 위원장이 “남조선 언론이 북조선에 대한 편파보도와 악의적 왜곡보도를 일삼고 있어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만약 남조선 언론이 편파·왜곡을 계속할 경우 선수단을 철수시키겠다”고 남한 언론보도의 편파성과 왜곡의 시정을 공식요청한 바가 있다. 여기에 대해 정동성 체육부 장관이 “오늘부터는 언론이 왜곡보도를 하지 않겠다”고 공식대응함으로써 북한에 대해 한국 언론이 이데올로기적 편파보도를 해 온 사실을 공식 시인했다. 또한 1995년 1월 압만에서 개최된 IOJ총회에 참석한 북한 조선기자동맹 최영삼 부위원장은 “이찬삼 기사를 봐라, 남조선 언론과 무엇을 믿고 교류사업을 하겠느냐”며 “중앙일보를 통해 북한실상을 편파적으로 보도하고 혈똥은 남조선 기사를 다시 입북시킬 수 없다”고 말하였다. 방정배, “통일지향적 언론환경 조성을 위한 제언,” 김정기 외, 「전후 분단국가의 언론정책: 독일의 동방정책과 한국의 북방정책 비교연구」, pp. 503~504.

통일논의가 양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⁸²⁾ 독일의 경우 서독 시민들뿐만 아니라 동독 시민들도 서독의 매스미디어를 수용하고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은 서독의 매스미디어의 이념적 스펙트럼이 다양하였기 때문이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으로는 서구의 경우처럼 이념적 정향이 다른 다양한 언론사들이 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인위적으로 언론사를 설립하거나 이를 유도하는 것은 민주적 체제 이념과 배치될 수도 있다. 따라서 기존의 언론사들이 이념적 지향성을 개방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언론사들이 나름대로의 이념적 지향성을 유지하고 이를 토대로 독자적인 통일관을 소유하는 것은 다원주의적이고 민주적 이념하에서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론의 수렴과 반영이라는 매스미디어의 기본적인 소명을 생각한다면 자신들과 반대되는 의견을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못하다면 최소한 매스미디어의 권위를 무기로 다른 의견들을 묵살하거나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경향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는 매스미디어가 통일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필요가 있다. 매스미디어는 정부로부터 독립적일 때, 시민들에게 가장 설득력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한

82) 학생들의 통일운동이 과격하고 급진화되는 최근의 현상은 통일에 대한 이견들이 공개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장이 없다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다면 정부 정책 홍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도 통일문제에 대한 언론의 독자적 영역을 확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일문제에 관하여 매스미디어의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매스미디어를 제약하는 각종 법률과 지침을 과감히 철폐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TV의 경우 북한과 관련된 영상의 독자적인 수집이나 방영은 정부의 허가없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방송사가 북한이나 통일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 제작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각종 제약으로 방송사들이 통일관련 프로그램 제작에 소극적이면 시청자의 관심도 저하될 수밖에 없다. 통일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 저하는 단순한 시청률의 문제만은 아니다. 궁극적으로는 통일에 대한 무관심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정부의 간섭과 통제는 매스미디어의 이념적 획일성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정부의 통제로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매스미디어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불신이 고조될 여지가 크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매스미디어가 정부의 통일정책을 충실히 홍보한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는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매스미디어가 통일지향적이기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매스미디어에 정보를 제공하는 태도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 현대에 남북관계와 북한의 폐쇄적인 정책을 고려한다면 통일관련

보도의 일차적인 정보원은 정부가 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언론인들도 인정하는 바이다. 그러나 통일정책의 홍보를 담당하는 관련 언론인들이 정부정책에 더욱 비판적이고, 이들은 대부분 정부의 정보제공 의지, 태도 등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 이와 같은 문제는 정부의 노력 여하에 따라 부분적으로라도 해소될 수 있는 문제이다. 현재와 같이 정부의 정책에 비판적인 언론인이 작성한 보도는 근본적으로 독자나 시청자들에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단순히 취재 편이를 위해서만은 아니다. 충분한 정보의 제공은 다양한 형태의 보도나 프로그램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며, 결과적으로 북한이나 통일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을 증폭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시도는 매스미디어를 활용한 통일교육의 확대라는 정책 목표와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정부가 매스미디어에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매스미디어에 대한 해당 부서의 발상 전환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앞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언론인들은 정부의 통일정책에 비판적이지만 정부의 통일정책 홍보를 가장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관련 부서의 관료들은 매스미디어가 단순히 정부와 정책에 대한 감시자 혹은 비판자가 아니라 통일과정에서 중요한 협력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보제공의 통로나 매체를 정부가 주도적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현재 북한관련 보도의 주요 정보원인 내외통신은 나름대로의 공헌에도 불과하고 많은 언론인들에게는 불만의 대상이고, 적지 않은 일반 시민들은 내외통신을 정부의 홍보기관과 동일시하기도 한다. 현실적 조건을 고려할 때 내외통신과 같은 기관을 정부가 직접 관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내외통신의 기능을 대폭 확대 개편하여 국내외적으로 인정받는 명실상부한 통신사로 발전시킨다면, 이는 북한 및 통일관련 보도를 풍성하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동시에 국가차원의 신뢰성 확보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내외통신과 같은 기존의 정보제공 기관의 확충과는 별도로 북한에 대한 기본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이를 매스미디어를 비롯한 관계 전문가에게 제공하는 기관의 설립도 고려할 수 있다. 일본의 '라디오 프레스'는 북한 관계 기초 정보의 수집 및 정리 그리고 배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관의 설립과 지원은 북한 및 통일 전문가의 양성과 해당 분야 연구의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셋째, 매스미디어 종사자 및 언론사는 기존의 냉전적 사고를 극복하고 통일에 대비한 역량을 키우는 차원에서 전반적인 의식개혁이 필요하다. 언론인들은 북한 및 통일관련 보도과정에 현실적인 제약이 많다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으나, 통일지향적

인 매스미디어로의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도 매스미디어 종사자 스스로의 노력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⁸³⁾ 이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언론인들은 통일문제에 대한 스스로의 관점을 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동독특파원들을 비롯한 서독 언론인들이 보인 동독 및 동독주민들에 대한 태도, 진정한 민족통합에의 의지 등을 귀감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또한 언론인 스스로가 통일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할 필요가 있다. 통일문제는 단순히 북한부나 통일부의 몫이 아니라 정치나 경제 그리고 문화나 과학부서와도 관련이 있다. 남북한간에 화해 및 교류가 진전되거나 통일이 이루어진 이후에 통일관련 보도가 매스미디어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 자신의 전공이나 소속 부서에 상관없이 통일을 대비하여 개인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언론사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언론이 역사적으로 독립운동, 민주화운동 등 사회변혁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역사적 경험을 통일언론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한국 언론의 긍정적인 전통을 계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언론사는 민족적 책임감을 갖고서 통일

83) 이러한 차원에서 한국기자협회·한국프로듀서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이 해방과 분단 50주년을 맞아 공동으로 제정한 “평화통일과 남북화해·협력을 위한 보도·제작준칙”은 좋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부록 2>참조.

관련 부서에 대한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 그리고 통일관련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을 능동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상업주의와 반공 일변도의 이념적 지향을 극복하여야 한다. 또한 언론 종사자 개인의 차원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언론의 법적·제도적 제약요인들을 제거하는 데도 언론사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넷째, 남한의 매스미디어에 대한 북한의 신뢰를 회복하는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매스미디어가 통일과정에서 유의미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입장변화도 중요한 변수가 된다. 언론교류나 방송의 상호시청취는 남한의 독자적인 판단이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매스미디어가 통일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북한의 지배층과 매스미디어 담당자가 납득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남한의 매스미디어가 단순히 정부의 대변인이 아니며, 체제 선전의 도구가 아님을 보여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남한 매스미디어가 북한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북한체제 및 북한 매스미디어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북한 사회주의체제가 존재하는 한 자유주의 국가와 같은 동일한 언론 조건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근본적으로 북한의 매스미디어는 정치적 선전이 일차적인 존재 목표이며, 당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북한의 매스미디어

를 자유주의적인 언론관에 입각하여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한 남북한간 언론교류도 어려워질 것이고, 이와 같이 북한 매스미디어를 대하는 것은 남한매스미디어에 대한 북한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도 장애가 될 수밖에 없다.

2. 통일을 향한 매스미디어의 역할 모색

통일과정에서 매스미디어는 직간접적으로 많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첫째, 무엇보다도 통일관련 언론인들 스스로가 지적하였듯이 남북한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남북한 주민간의 상호 적대감과 이질감을 약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매스미디어는 일차적으로 북한체제뿐만 아니라 북한의 주민들 삶의 다양한 측면을 일반 시민들에게 소개하는 정보제공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북한 관련 보도들은 대부분 정치적인 문제에 집중하고 있으며, 북한 집권층의 부정적인 일상사를 묘사하는데 관심이 많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통일 이후 민족공동체 형성의 실질적인 주역인 북한의 일반 주민들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미약했다. 그리고 북한사람의 생활을 다루는 기사들도 대부분 북한실정을 열악하게 그리는데 치중하였다. 이러한 결과 남한주민들은 북한의 권력구조나 지배층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나, 북한사람들의 일상적인 생활 중 일부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만 알

고 있다.

북한의 정치체제와 지배층에 관심을 기울이고 북한사람들의 부정적인 삶을 강조하는 것은 체제 경쟁이라는 냉전적 사고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남한의 체제 우월성은 이미 증명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북한 일반 주민들과 이들의 삶의 긍정적인 측면을 발굴해서 남북한주민들의 상호이해를 증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둘째, 매스미디어는 통일에 대한 다양한 사회집단의 의견을 결집하는 매개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분단과 오랜 군사정권으로 남한사회의 이념적 갈등은 탈냉전시대가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첨예하다고 볼 수 있다. 통일문제는 이념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통일과정과 방법에 대한 정치적 갈등도 심각한 실정이다. 서로 다른 이념적 지향성을 가진 사회집단들이 나름대로의 북한관, 통일관, 그리고 통일방안을 열린 마당에서 공개적으로 의사를 교환하고 이를 통하여 보다 나은 통일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필요 불가결하며, 이를 주도할 수 있는 것은 매스미디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매스미디어 자체가 하나의 이념이나 의견을 가진 사회집단으로 위상을 가지게 되면, 공개적인 토론의 장은 상실될 것이다. 또한 특정한 의견을 갖고 있는 집단을 매도하게 되면

통일문제를 둘러싸고 폭력적인 의견갈등이 야기되거나, 사회적 의견 개선 기회를 잃은 집단은 지하조직화되어 잠재적인 사회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념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세대간, 지역간, 직업집단간, 성집단간의 통일의식은 각기 다를 수 있다. 이와 같은 집단들의 통일관 차이를 밝혀주고 조정할 수 있는 통로로도 언론은 중요한 위치에 서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매스미디어의 막대한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시민 사회의 통일 운동에 언론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세계사적으로 비정부 시민분야(NGO)의 정치·사회적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으며, 한국사회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통일과정에서도 시민사회 분야는 점차 중요해질 수 있다.

매스미디어가 시민사회의 핵심 축이라는 점을 자각한다면 매스미디어가 시민사회의 통일운동과 결합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우며 동시에 시민사회 통일운동을 극대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몇몇 신문사에서 추진하였던 북한에 대한 식량 원조와 같은 통일운동은 남북한간의 대치상황에서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조기에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중요한 통일교육이 될 수 있다.

셋째, 매스미디어가 중심이 되는 남북한 교류도 통일과정에서 매스미디어가 추진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사회문화 교류의 차원에서 언론 교류는 중요한 의미

를 갖고 있다. 왜냐하면 매스미디어의 교류는 정치 중심적인 통일관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독일이나 중국과 같이 기자들이 직접 교류하는 단계로 발전한다면 기자의 눈을 통해서 남북한주민이 직접 교류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남북한 대치상황에서 남북한 언론은 체제선전과 상호 비판이라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상대방 언론에 대한 불신도 대단히 높다고 볼 수 있다.⁸⁴⁾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남북한 언론간에 유의미한 교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언론인교류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가능한 범위에서 남북한간 교류를 준비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당장 언론인 교류나 기사 및 프로그램의 교류와 같은 직접적인 교류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매스미디어의 복합적인 특성을 고려한다면 교류의 방안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찾아질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방송 및 인쇄 기술, 방송언어와 신문용

84) 사회구조의 판이함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언론에는 상호유사성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정보기관의 통제를 받는다는 점, 상대체제의 정보는 국가에서 경영하는 독점적인 통신사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점, 독립된 부서(남한의 북한부, 북한의 남조선부)가 존재하지만 수동적인 취재와 보도를 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남북한 언론이 지금까지 체제수호의 첨병을 하였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유사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안춘옥, “남북한 언론보도의 제문제,” 참조.

어와 같은 기술적이고 비정치적인 분야의 교류는 상대적으로 실행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⁸⁵⁾ 특히 언론교류에서 개방을 주도한 쪽이 교류의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기존 분단국의 경험을 고려한다면⁸⁶⁾ 남한 당국이나 언론이 개방적인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

넷째, 통일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정부 통일정책의 가변성을 고려한다면 정부의 통일정책을 정확히 전달하는 역할을 매스미디어가 수행하여야 한다. 냉전의 몰락과 같은 국제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급속한 탈산업화 현상, 새로운 사회집단의 출현과 세대간 의식격차 확대는 통일정책의 시의 적절한 수정을 강요하고 있다. 더욱이 여러 면에서 체제위기를 겪고 있는 북한에서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할 것을 배제할 수 없다면 이에 대응하는 통일정책의 수립도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통일정책이 어떠한 것인지를 국민들이 정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이 정부 통일정책의 방향이나 세부내용을 알지 못한다면 통일정책은 실천력을 확보할 수 없을 것이다.

85) 이를 비롯한 방송 분야의 교류 문제에 대해서는 박형숙, “남북방송교류의 과제와 전망,” 원우현 외, 「남북한 언론교류」 참조.

86) 양안관계에서도 먼저 일방적인 개방을 결정한 중국이 대만에 비해서 주도권을 쥐고 교류의 방안이나 각종 제한 조치 등을 결정하고 있다. 陳力丹·閔大洪·郭鎮之, “中國大陸·臺灣間的 言論交流,” 원우현 외, 「남북한 언론교류」, p. 187.

다섯째, 북한주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남북한간에 방송교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남북한간에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고양되면 독일의 경우와 같은 언론교류와 상호 방송 시청취가 가능해질 수 있다. 이 경우 남한의 매스미디어는 북한주민들이 남한체제의 특성과 남한주민들의 삶을 이해하고, 통일 이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단계에서 기존의 체제 선전적인 선무방송과 같은 내용과 형식의 프로그램이 중심이 된다면 북한주민들에게 남한 매스미디어에 대한 불신감과 적대감을 고취시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 및 프로그램 제작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여섯째, 통일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통일문화 형성에 매스미디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반세기에 걸친 분단과 장기간의 적대적 대치관계, 그리고 독자적으로 선택한 발전전략은 남북한이 상이한 사회문화적 성격을 갖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통일이 단순히 정치·경제적 차원의 체제 통합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통합으로 완성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통일문화를 형성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통일문화의 성격이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그리고 분단시절에 남북이 독자적으로 이룩한 발전의 성과를 어떻게 계승할 것인가를 모색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다.

매스미디어가 문화전반에 갖는 커다란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통일문화의 구성에 매스미디어는 책임감을 갖고 참여할 소명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매스미디어는 한국문화의 원형에 대한 탐구, 분단으로 훼손된 문화의 정체성, 남북한 문화의 본질 및 통일문화의 모색과 같은 문화사업을 주도하거나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사나 프로그램 작성과정에서 통일문화를 지향함으로써 통일문화를 구현하는데 실천적인 차원에서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제 V 장 결 론

현대사회에서 매스미디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사회의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통일문제에서도 매스미디어는 커다란 영향력을 갖고 있다. 매스미디어는 직간접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인식과 통일문제 인식을 방향 지우고 있으며, 정부의 통일정책은 매스미디어를 통하여 국민들에게 전달되고 있다. 이와 같은 중요성을 매스미디어 스스로가 인식하고 있음은 현재 남한의 언론사들이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다.

분단 이후 현재까지 남한의 매스미디어는 남북한 대치상황에서 반공주의를 바탕으로 남북한 체제경쟁에서 남한체제의 우수성을 과시하고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고취하는 과정에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남북한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변화하는 국내외적 통일환경을 적절히 수용하고,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지향하는 태도를 보였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북한이 여전히 김일성주의에 토대를 둔 대남혁명투쟁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대내외적인 조건은 급격히 변하고 있다. 또한 남한은 산업화의 성공으로 체제경쟁에서 우위를 점하였을 뿐만 아니라 남북한 격차는 날로 확대되고 있

다. 동시에 남한사회는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공으로 급격하게 탈중심화·탈이념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변화는 대북인식뿐만 아니라 통일추진 방법과 통일의 목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의 매스미디어는 과거의 방식과 과거의 언어로서 통일문제에 임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이 결과 국민들은 매스미디어로부터 통일과 관련된 정보를 얻으면서도 매스미디어를 신뢰하지 않으며, 이는 정부 통일정책에 대한 불신과도 무관하지 않다.

매스미디어가 통일과정과 관련된 문제는 상업주의와 이념적 편협성이라는 매스미디어 자체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매스미디어를 통제하고 일방적으로 활용하는 데만 관심을 기울인 정부차원의 문제도 생각하여야 한다. 독일 통일에서 매스미디어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독일 매스미디어가 투철한 역사의식과 사회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서독의 정부가 매스미디어가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앞장을 섰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매스미디어는 통일을 대비하는 자세를 정립하여야 할 것이며 정부는 통일지향적인 매스미디어가 될 수 있도록 각종 법규를 정비하는 등 여건 조성에 힘을 써야 할 것이다.

독일의 통일과 냉전체제의 종식으로 정부와 시민사회가 통일 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게 됨에 따라 매스미디어도 통일

에 대한 관심을 점차 확대하고 있으며, 그만큼의 영향력도 증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남북관계가 진전되거나 급변사태가 발생하여 급격하게 통일이 이루어지는 단계에 돌입하게 되면 매스미디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통일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에도 매스미디어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통일 이후에 수립될 새로운 국가의 이념이나 체제를 홍보하는 것은 기존의 교육체제만으로는 불가능하다. 특히 정규교육을 마친 성인을 대상으로 단기간에 효과적인 정치교육을 하기 위한 매체로서 매스미디어를 능가할 정치사회화 매체는 없을 것이다. 통일 이후에 새로운 문화체제를 정립하는 과정에서 매스미디어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언어의 통합, 공통적인 민족유산의 발굴 및 보급, 그리고 소외된 지역 문화의 보호, 분단시기에 독자적으로 이룩한 문화 발전의 성과를 보존하는 것도 매스미디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통일 이후의 정치사회적 혼란을 예상한다면 언론 고유의 사회감시 기능도 더욱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분단시대에 피해를 입은 집단의 사적인 보복이나, 재산 탈취와 같은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다수 발생할 것이고, 통일과정에서 이득을 보려는 각종 이익집단이 생겨날 여지가 크다. 또한 혼란을 명분으로 권위주의적 통치체제를 복원하려는 정치집단의 출현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화합적이고 민

주적인 통일을 위해서는 언론의 비판과 감시기능이 절대적으로 요구되어질 것이다.

통일과정과 그리고 통일 이후 매스미디어가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면, 완전한 통일에의 절대적 시간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통일의 길에서 겪어야 할 많은 문제점도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김정기 외. 「전후 분단국가의 언론정책: 독일의 동방정책과 한국
의 북방정책 비교 연구」. 서울: 한국언론연구원, 1995.

김정탁 외. 「남북한 통일과 언론」. 서울: 한국언론연구원, 1991.

김해식. 「한국언론의 사회학」. 서울: 나남, 1994.

민족통일연구원. 「1992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결과」.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2.

_____. 「1994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결과」.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_____. 「1995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결과」.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박기순·전리령. 「한국신문에 반영된 북한 ‘이미지」」. 서울: 소화,
1995.

방정배·김민남. 「언론과 현대사회」. 서울: 나남, 1995.

방정배·한은경. 「남북한 미디어 교류와 북한사회개방의 커뮤니
케이션 전략」. 한국학술진흥재단 보고서 (1992. 3).

원우현 외. 「남북한 언론교류」. 서울: 한국언론연구원, 1992.

유재천 외. 「한국사회변동과 언론」. 서울: 소화, 1995.

유재천·이민웅. 「정부와 언론」. 서울: 나남, 1994.

이우영. 「통일문제에 대한 세대간 갈등 해소방안」.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이정춘. 「현대사회와 매스미디어」. 서울: 나남, 1990.

이정춘·전석호. 「분단국의 통일과 방송정책」. 서울: 청림출판, 1991.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언론과 사회」. 서울: 민중사, 1983.

한국언론학회. 「한국 언론 내용 분석론」. 서울: 나남출판, 1995.

Maletzke, Gerhard. *Psychologie der Massen Kommunikation*. Hamburg: 1963. 박유봉·김진홍 역. 「매스컴 심리학」. 서울: 법문사, 1976.

Mills, C. W. *The Power Elit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56.

Packard, V. *The Hidden Persuaders*. New York: David Mckay, 1957.

Shoemaker, Pamela J. & Reese, Stephen D. *Mediating Messages: theories of Influences on Mass Media Content*. 김원용 역. 「미디어 사회학」. 서울: 나남, 1992.

Wright, C. R. *Mass Communication: A Sociological Perspective*. New York: 1986. 김지운 역. 「매스컴 통론」. 서울: 나남, 1987.

2. 논문

강태완. “동서독 신문의 구조, 통일정책 및 보도태도에 관한 연구.” 김정기 외. 「전후 분단국가의 언론정책: 독일의 동방정책과 한국의 북방정책 비교 연구」. 서울: 한국언론연구원, 1995.

경향신문·대륙연구소. “‘남북관계·북미회담’ 여론조사” (1994. 9). 「경향신문」, 1994. 10. 6.

구종서. “남북한 통일관련 보도의 현황과 과제.” 김정기 외. 「전후 분단국가의 언론정책: 독일의 동방정책과 한국의 북방정책 비교 연구」. 서울: 한국언론연구원, 1995.

김광호. “통일전 동서독의 방송정책 및 보도.” 김정기 외. 「전후 분단국가의 언론정책」. 서울: 한국언론연구원, 1995.

김기태. “통일관련 기사의 보도경향과 과제.” 「저널리즘」 (1989 봄·여름).

김민환·김원태. “남·북한총리회담 보도 사례분석.” 「신문연구」 (1990 겨울).

김성문. “한국미디어의 정치사회학.” 방정배·김민남 편. 「언론과 현대사회」. 서울: 나남, 1995.

김원용. “텔레비전 시청과 공산권 국가 인식 및 태도에 관한 연구.” 「신문학보」 24 (1989 5).

김정탁. “남한 언론의 북한 보도.” 김정탁 외. 「남북한 통일과 언

- 론」. 서울: 한국언론연구원, 1991.
- _____. “북한부 취재보도의 문제점.” 김정탁 외. 「남북한 통일과 언론」. 서울: 한국언론연구원, 1991.
- _____. “언론인의 북한관 및 통일관.” 김정탁 외. 「남북한 통일과 언론」. 서울: 한국언론연구원, 1991.
- 박정순. “취재원 제한으로 보도내용 획일화: 고정관념 못 깨고 부정적 측면 강조.” 「신문과 방송」 (1990 12).
- 박조원. “남·북문제에 관한 사실 연구.”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석사학위 논문, 1990.
- 박종수. “남북한 평화통일을 위한 방송의 역할.” 문화방송창사 30주년 기념 방송연구논총 「방송과 문화」. 서울: MBC, 1991.
- _____. “동서독 언론교류 사례.” 원우현 외. 「남북한 언론교류」. 서울: 한국언론연구원, 1992.
- 박형숙. “남북방송교류의 과제와 전망.” 원우현 외. 「남북한 언론교류」. 서울: 한국언론연구원, 1992.
- 방정배. “분단극복과 통일을 위한 언론의 역할과 과제.” 성대 사회과학연구소 편. 「전환기 분단국 문제」. 서울: 성대 출판부, 1991.
- _____. “동서독 국가의 정책변화와 언론.” 김정기 외. 「전후 분단 국가의 언론정책: 독일의 동방정책과 한국의 북방정책 비교 연구」. 서울: 한국언론연구원, 1995.

_____. “통일지향적 언론환경조성을 위한 제언.” 「통일시대 언론의 역할과 정책」. 한국언론연구원 주최 광복 50주년 한국 국제 심포지엄 발표 논문 (1995. 7. 7).

백선기. “보도와 이데올로기: ‘김일성 사망’ 신문보도에 대한 르불(Reboul)의 분석틀 적용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 「한국 언론 내용 분석론」. 서울: 나남출판, 1995.

송건호. “한국 현대언론사론.”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언론과 사회」. 서울: 민중사, 1983.

안춘옥. “남북한 언론보도의 제문제.” 김정탁 외. 「남북한 통일과 언론」. 서울: 한국언론연구원, 1991.

_____. “북한 언론의 남한 보도.” 김정탁 외. 「남북한 통일과 언론」. 서울: 한국언론연구원, 1991.

원우현. “남한언론매체와 한국의 통일.” 「미 사회과학협의회 학술대회」 발표 논문 (1990. 11. 17).

윤영철. “사회변동과 언론통제.” 유재천 외. 「한국사회변동과 언론」. 서울: 소화, 1995.

이경수. “통일문제에 관한 한국신문의 보도태도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석사학위 논문, 1991.

이종수·윤석년. “통일에 관한 보도경향.” 「신문연구」 (1990 여름).

이효성·신대섭. “정치권력과 대중조작: 6공 이후의 주요 유형분석을 중심으로.” 방정배·김민남. 「언론과 현대사회」. 서

울: 나남, 1995.

임상원. “북방보도와 외교.” 「언론연수원 강의록」. 서울: 한국언론연구원, 1989.

최상식. “통일·분단 소재 드라마의 평가와 전망.”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창립 9주년 기념 심포지엄 「통일과 방송」 발표 논문 (1996. 9. 4).

최선열. “통일에 대한 언론인들의 역할 인식.” 김정기 외 「전후 분단국가의 언론정책: 독일의 동방정책과 한국의 북방정책 비교 연구」, 1995.

Althusser, Louis. “Ideology and Ideological State Apparatus.” Ben Brewster. trans. *Lenin and Philosophy and Other Essays*.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1971.

Curran, J. “Capitalism and Control of the Press. 1880~1975.” in Curran et al. *Mass Communication and Society*. California: Sage Pub, 1979.

Curran, J., Gurevitch, M., & Woolacott, J. “The study of the Media: Theoretical Approaches.” in M. Gurevitch, T. Bennet, J Curran. & J. Woolacott. eds. *Culture, Society and the Media*. London: Methuen, 1982.

Hesse, K. “Cross-border Mass Communication from West to East Germany.” *European Journal of Communication*. 5 (1990).

- Pragal, P. “당시의 동독 특파원이 본 언론 상황.” 한국언론연구원 주최 「광복 50주년 기념 한독국제심포지엄」 발표 논문. 김정기 외. 「전후 분단국가의 언론정책: 독일의 동방정책과 한국의 북방정책 비교 연구」, 1995.
- Weiβ, J. “독일 통일 전후의 동서독 언론 보도.” 한국언론연구원 주최 「광복 50주년 기념 한독국제심포지엄」 발표 논문. 김정기 외. 「전후 분단국가의 언론정책: 독일의 동방정책과 한국의 북방정책 비교 연구」, 1995.
- Wirth, L. “Consensus and Mass Communication.” *Annual Review of Sociology*, 13 (1948).
- Wright, C. R. “Functional Analysis and Mass Communication.” *Public Opinion Quarterly*, 24 (1960).
- 陳力丹·閔大洪·郭鎮之. “中國大陸·臺灣間的 言論交流.” 원우현 외. 「남북한 언론교류」. 서울: 한국언론연구원, 1992.

부록 1: 통독과정에서 동서독의 언론관련 주요협정, 법규 및 선언

- 동서독 기본조약(Grundvertrag: 1972. 12)
- 언론인의 취재기회 보장에 관한 서신교환(Michael Kohl & Egon Bahr, 1972. 11. 8)
 - 다른 국가들의 특파원들과 같이 동일한 대우를 받을 권리
 - 직업상 거주를 할 경우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해 언제든지 입·출국할 수 있는 권리
 - 동서독내 뉴스, 의견 그리고 해설에 관해 즉각적으로 보도할 수 있도록 취재할 수 있는 권리
 - 정상적으로 공론형성에 필요한 뉴스중계수단을 활용할 권리
 - 공공기관의 정보를 취재할 권리와 그 기관의 대표 그리고 정부당국과 기관에 관해 뉴스를 수집할 권리
 - 개인적으로 직업활동에 필요한 물품, 자료, 그리고 관련물들을 휴대할 권리

◦ 동서독 상주특파원 활동조건

- 동서독 현지 내에 거주
- 공중보건과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금지한 규정 및 법령을 준수

◦ 동독내 다른 국가의 출판기관 및 이들 특파원에 대한 법령 (1973. 2. 21)

- 제5조 1호: 상주특파원의 준수사항
 -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국제법상의 규약을 준수
 - 동독관련 법규들을 준수
 - 동독 국가기관, 지도인사, 동독 관련 국가들을 중상 또는 비방하는 행위를 금지
 - 진실되고, 사실적으로 그리고 정확보도를 해야하며, 사실에 대한 악의·왜곡보도를 금지
 - 이러한 내용을 위반할 경우 취재활동에 대한 허가를 취소한다.
- 동법 시행령
 - 제1조 3항: 상주특파원은 다른 언론기관을 위해 활동을 해서는 안된다.

- 제2조: 제5조 1호를 위반할 경우 동독 외무성의 신문 및 정보담당국의 책임자는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a. 특파원에 대한 경고
 - b. 상주 또는 취재활동허가 취소시 추방
 - c. 사무실 폐쇄
 - 제4조 1호: 상주특파원은 동독의 수도인 베를린을 벗어날 경우 사전에 통지의무
 - 제4조 2항: 동독내 국가기관들, 공공시설물, 주민들의 공적 시설, 일반회사, 노조에 관한 취재활동은 허가
 - a. 지도급인사와 인터뷰시 반드시 외무성내 언론관계국에 제출.
- 동독 공산당 제9차 중앙위원회 회의: ‘방송 자유청취 선언’(1973. 10)
- 호네커 서기장, “우리 인민은 누구든지 자기기호에 따라 자유로이 방송을 청취·시청할 수 있으며, 수신기 채널 선택권을 가질 수 있다.”
- 서독의 슈피겔(Spiegel)지 메트케(J. R. Mettke) 특파원 추방 (1975. 12. 16)

◦ 동독 상주특파원의 특별우대: ‘국경 통과증 발급’(1976)

◦ 독일방송(Deutschlandfunk)보도: 프로그램 준칙(1983. 9. 29)

· 제2조: 보도의 이슈화, 다원적 보도, 정보의 상세성

- 제1호: ‘독일’에 대한 보도에서 이슈에 대한 보도를 우선시 한다. 또한 보도내용의 형평성, 객관성, 상호존중이 보장되어야 한다.

- 제2호: 정보보도는 본질적인 자료설명을 통하여 독립적인 공론형성에 기여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보도는 기존 여론의 다양성을 총체적으로 다양하고, 상세하게 보도해야 한다. 또한 개인의 사적 판단에 의해 중요사실을 보도하지 않거나 왜곡 또는 추측적인 보도기법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 제3조: 독일 방송의 과제는 바로 특히 동독 국민들의 정보요구 및 필요성에 부응하는 객관적, 적합적, 종합적인 보도를 해야 한다. 이러한 보도는 독일인의 상호양해와 상호공동체인식을 고양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이러한 정신이 각 주의 방송법에 반영되고 있다)

◦ 서독 공영방송과 동독 각료회의 텔레비전국가위원회간의 협

정(1986. 5. 6)

· 제1조

- 협정 당사자들은 서로 TV 프로그램을 구입한다. 여기서 상호간의 프로그램 구매는 기본적으로 모든 프로그램 종류(Programmgatungen), 특히 TV극과 TV영화, 연극녹화물, 오락프로그램, 기록물, 스포츠 프로그램, 어린이 및 청소년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 협정 당사자들은 정기적으로 그들의 TV프로그램에 관한 제공 내용, 카탈로그 또는 적절한 정보수단을 교환한다. 각 협정 당사자들은 매년 1~2회에 걸쳐 상대측의 대표들을 위한 프로그램 시찰 행사를 개최한다. 또한 협정 파트너 어느 한쪽의 요구가 있을 때는 특별시찰도 실시한다. 프로그램의 구매조건은 그때그때 합의하에 확정한다.
- 저작권은 협정 당사자들에 의해 장소, 대상, 시간적으로 무제한하게 보장되지 않는 한 보호되어야 한다. 양도하는 협정 당사자는 방송물의 판매시, 구입하는 협정 당사자에게 현존하고 있는 저작권법적 의무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그밖에 필요한 저작권법적 합의는 체결된 프로그램 구매계약서 내에서 이루어진다.

- 협정 당사자는 구매된 프로그램을 체결된 프로그램 구매계약서의 범위 안에서 그리고 또한 여기서 각각의 경우에 해당하는 저작권법적 합의사항을 유의하면서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사용할 권리가 있다.

협정 당사자들은 이 프로그램을 편집할 수 있는데, 단 이를 통해 그 작품의 주장이나 내용들이 왜곡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협정 당사자들은 상호 협정 파트너의 동의가 없이는 입수된 프로그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할 권리가 없다.

- 협정당사자들은 방송일시에 대한 세부사항 등 프로그램 이용에 관해 서로 정보를 제공한다.

· 제2조: 협정 당사자들은 각자의 국내 방송법규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그들 능력과 권한에 따라 상주특파원 및 비상주특파원(Reisekoreespondenten)과 리포터 그리고 이들의 카메라팀을 지원한다.

· 제3조: 이같은 서비스(Dienstleistung)가 Eurovision과 Intervention 간에 적용되는 관례나 상호주의에 따른 협정에 무료로 제공되는 것이 아닌 한 협정당사자들은 정치, 문화, 스포츠, 이벤트의 보도시에 합의된 사례금을 주고 상호간에 서비스(직접중계를 포함하여)를 허용한다.

제4조: 협정 당사자들은 공동제작을 할 수 있다. 협작을 위해서는 특별한 합작조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 협정 당사자들은 시사성이 있는 프로그램이나 기타 프로그램들의 일부 장면을 자신들의 프로그램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관례를 적용한다.

제6조: 협정 당사자들은 법적으로 가능할 경우 상호 요청에 의해 제3국에서 제작된 프로그램의 독일어번역물을 구입한다. 이 세부사항은 그때그때 합의하에 결정한다. 저작권의 보상과 각 권리소유자로부터의 방송허가권(Sendelizenz)획득은 이와는 별도로 다룬다.

제7조: 협정 당사자들은 상호 정보와 프로그램에 관한 간행물을 제공한다.

제8조

- 협정 당사자들은 정보수집을 위한 방문, 박람회(Messe), 전시회 그리고 다른 기회 등에 상호 대표자를 파견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그때마다 특별한 합의를 요한다.
- 제작기술적인 경험교환은 별도의 합의에 따른다.

제9조: 협정 당사자는 상호 TV콘테스트와 페스티벌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응모 방송물과 공식대표단의 참여가능성을 우호적인 입장에서 검토한다.

- 제10조: 협정 당사자의 양측 대표는 합의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지속적인 협력의 기본적 논의와 조정을 위해 회합을 갖는다. 이 회합은 협정 당사자간 교대로 개최한다.
- 제11조: 양측은 상기 합의된 사항의 실행과정에서 야기되는 모든 논쟁점을 호의적으로 조정하도록 노력한다.
- 제12조
 - 상기 합의사항은 3년간 유효하며 그 효력은 서명과 동시에 발생한다.
 - 협정 체결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최소한 시효만료 3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해약을 통보하지 않는 한, 이 협정은 차후 3년간씩 자동 연장된다.
 - 이 협정의 변경 또는 보완은 협정당사자들간에 서면으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 통일 조약 제36조:
 - (1) '동독 라디오'와 '독일텔레비전방송'은 국가로부터 독립적이고 공법적인 기구로 과거 기본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던 새 연방주(구동독 지역)와 베를린의 한 지역에 1991년 12월 31일까지 방송한다. 방송에 대한 권한은 주에 있으며, 주는 이 임무를 인식하고 있다. 이 기구의 임무는 제3조에 명시한 구동독 주민들에게 공영방송이라는 기본

원칙에 따라 방송해야 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연방채신부에 속했던 전송시설뿐만 아니라 라디오·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경영을 위한 시설 및 대지가 이 지구에 귀속된다. 제21조와 같다.

(2) 이 기구는

① 방송위임자

② 방송이사회로 구성되어 있다.

(3) 방송위임자는 주지사들의 추천에 대해 구동독 인민의회가 선출한다. 만약 인민회의를 통하여 선출되지 못할 경우 방송위임자는 각 주(새 연방주) 대변인 및 베를린 시장의 다수결에 의해 선출된다. 그는 이 기구를 관장하고, 법적으로 이 기구를 대표한다. 또한 그는 일정한 예산 범위 안에서 이 기구가 위탁된 일을 충족시킬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당장 1991년 수입과 지출이 같은 예산을 세워야 한다.

(4) 방송이사회는 사회적인 연관그룹들의 대표들로서 공인으로 알려진 18명으로 구성된다. 새 연방주와 베를린은 이 이사회를 위해 3명씩 선출한다. 이 이사회는 모든 프로그램 문제에 대한 심의권이 있으며 인사, 경영, 재정문제에 대한 참정권을 가지고 있다. 방송이사회의 3분의 2로 방송위임자를 해임시킬 수 있다. 또한 이 이사회는 이 수로

새로운 방송위임자를 뽑을 수 있다.

- (5) 이 기구는 우선적으로 제3조에 지칭된 구동독 지역 시청자들의 시청료 수입으로 재원이 조달된다. 즉 이 기구는 시청료 추종자이다. 이 기구의 재원 나머지는 광고수입과 기타수입으로 조달된다.
- (6) 제1호에서 언급한 시한 내에 이 기구는 제1조에 언급한 주들과 공동으로 국가방송계약을 맺어 방송의 연방구조를 만든 다음 해체되거나 혹은 개별 혹은 여러 주들이 만든 방송공사에 위임된다. 만약 1991년 12월 31일까지 국가계약이 체결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시한과 더불어 자동 해체된다. 현시점에서의 자산과 부채는 지분에 따라 새 연방주로 넘어간다. 이 지분은 구동독지역에서 1991년 6월 30일 현재 방송시청료 수입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어쨌든 이 연방주들은 대국민 방송제공이라는 의무를 다해야 한다.
- (7) 1991년 12월 31일 국가조약이 효력을 발생함으로써 제1호차에서 6호까지는 효력을 잃게 된다.

부록 2: 평화통일과 남북화해·협력을 위한 보도·제작준칙

전 문

분단된 조국의 통일은 온 겨레의 염원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언론은 남북관계 및 통일문제 보도·제작에서 화해와 신뢰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보다는 불신과 대결의식을 조장함으로써 반통일적 언론이라는 오명을 씻어내지 못했다.

이같은 반성 위에서 한국기자협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및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등 언론 3단체는 해방과 분단 50주년을 맞아 우리 언론이 통일언론으로 거듭나기 위한 다짐으로 공동의 보도·제작 규범을 제시한다.

우리는 ‘7·4 남북공동성명’과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정신에 따라 남과 북의 평화공존과 민족동질성 회복에 힘쓰며, 민족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고 궁극적으로 남과 북이 단결하여 자주적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도록 노력한다.

총 강

1. 우리는 대한민국(약칭: 한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약칭: 조선)으로 나누어진 남과 북의 현실을 인정하며, 상호존중과 평화통일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상대방의 국명과 호칭을 있는 그대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우리는 냉전시대에 형성된 선입견과 편견에서 벗어나 객관적으로 보도·제작함으로써 남북 사이의 공감대를 넓혀 나간다.
3. 우리는 남북관계 보도·제작에서 언론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가로막는 법적·제도적 장애를 타파한다.
4. 우리는 남과 북의 우수한 민족문화 유산을 공유하고 민족의 공동번영을 추구할 수 있는 기사 및 프로그램 개발에 힘쓴다.
5. 우리는 통일문제에 관한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공정하게 반영하여 민주적인 여론형성에 기여한다.

보도실천요강

1. 남북 긴장해소 노력: 남북간의 평화를 저해할 수 있는 군비 증강 등 제반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며, 남북간 긴장 및 불의의 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평화적인 해결을 이끌어 내는 데 초점을 맞춰 보도한다.
2. 인물 호칭·직책 존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물에 대한 호칭은 대한민국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성명 다음에 직책을 붙여 호칭한다.
3. 관급자료 보도 유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관급 보도자료의 무절제한 인용·전제를 피하고 최대한 확인절차를 거쳐서 보도한다.
4. 내외통신 인용 책임: 내외통신 자료는 관급 보도자료 가운데 하나이므로 내외통신 자료를 전적으로 인용한 보도라 할 지라도 그 책임은 이를 보도한 기자에게 있다는 점에 유의한다.
5. 외신보도 신중 인용: 외신을 활용한 특정세력의 목적성 여론

조성을 경계하며, 제3국이 자국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외신보도는 인용하지 않는다.

6. 1차자료 적극 활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신문·방송·통신 보도와 잡지 등 1차 자료에서 보도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적극 활용한다.
7. 각종 추측보도 지양: 국내외 관계자들이 무책임하게 유포하는 각종 설은 보도하지 않는다. 다만 취재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8. 사진·화면 사용 절제: 해당기사와 무관한 자극적인 화면이나 사진을 사용하지 않으며, 냉전과 대결의 시각보다 남북간 화해와 협력을 이끌어 내는데 노력한다.
9. 희화적인 소재 지양: 남북간 언어, 문화, 생활의 차이와 상호이질감을 우리의 잣대로 평가하거나 보도에 희화적 소재로 삼지 않는다.
10. 망명자의 증언 취사: 망명자의 증언은 그로부터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기사화하도록 한다. 전언이나 추정 등을 기사화해야 할 경우는 ‘전언’, ‘추정’ 등을

명기한다.

제 작 실 천 요 강

1. 정보제공 적극 편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련 프로그램 편성시 형식적·소극적 편성에서 벗어나 다큐멘터리·드라마·오락물 등 각 장르별로 적극 편성하며, 남북 관련 긴급 혹은 특집프로그램 편성시 정치적 의도가 없는지 특히 유의한다.
2. 통일지향 가치 추구: 기획, 출연자 선정, 편집 등의 제작과정에서 민족동질성 회복, 화해·공존공영의 증진, 통일의 추진이 구현되도록 적극성을 갖고 제작에 임한다. 프로그램 제작시 여러 가치가 충돌할 경우 인간 존엄성 존중, 민족이익 수호, 민족화해 증진 등의 가치를 판단의 우선 가치로 삼는다.
3. 냉전시대 관행 탈피: 냉전시대에 형성된 내면적 자기검열, 습관화된 분단의식, 누적된 선입견과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제작한다. 또 냉전의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가요·가곡·드라마·영화 등의 방송을 피하며, 갈등

을 조장하는 불필요한 화면을 사용하지 않는다.

4. 상업·선정주의 경계: 상업주의와 선정주의를 경계하며, 안일하고 편의적인 제작태도를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나아가 현재의 모든 방송행위가 미래의 통일민족문화와 직결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프로그램 제작에 임한다.
5. 다원주의 가치반영: 사회적 가치나 의견 등의 메시지를 시청취자에게 전달할 때는 제작진이 단정적 결론을 내리기보다 시청취자가 듣고 보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 통일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가능한 한 가감 없이 프로그램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6. 보도활용 제작 신중: 국내외 매체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련 보도를 근거로 가십·풍트 프로그램을 제작할 경우 보도의 정확성, 취재원의 신뢰도, 보도 이면에 게재되어 있을 수 있는 정치적 의도 등을 충분히 검증한 뒤 방송하며, 무분별하게 인용하여 민족화합을 저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프로그램화하지 않는다.
7. 생활문화 적극 소개: 정치적 통합을 넘어서는 남북 주민간의 사회·문화적 통합이 진정한 최종적 통일임을 인식해 조선민

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들의 생활과 문화를 프로그램 소재로 적극 채택한다.

8. 능동적인 자료 접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프로그램 제작시 정보의 편중성·부족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제작진 스스로 노력한다. 1차자료를 적극 활용하고, 각 분야 연구자 등 폭넓은 인적자원 확보에 각자가 능동적으로 힘쓴다.
9. 남북차이 이해 노력: 언어·문화·생활·관습·가치관 등에서의 남북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기 위해 노력하며, 가능한 한 이 차이들을 회화적 소재로 삼지 않도록 한다.
10. 남북 동질성의 부각: 남북의 차이점보다는 같은 점을, 과거보다는 미래를 부각시킴으로써 미래지향적·통일지향적 방향으로 프로그램 제작에 힘쓴다.

부록 3: 내용분석을 위한 Coding Guide

<id>

<사실의 주제>

1. sub1: 남한내부 ① 있다
2. sub2: 남한의 대외정책 ① 있다
3. sub3: 북한내부 ① 있다
4. sub4: 북한의 대외정책 ① 있다
5. sub5: 남북관계 ① 있다
6. sub6: 국제기구 및 국제환경 ① 있다

<세부 주제>

7. content1: 정치 ① 있다
8. content2: 경제 ① 있다
9. content3: 군사 ① 있다
10. content4: 문화 · 인사교류 ① 있다
11. content5: 기타 ① 있다

12. atti: 북한에 대한 태도

- ① 적대 ② 경쟁 ③ 동일민족

13. confi: 신뢰

- ① 불신 ② 신뢰 ③ 유보 ④ 중립

14. change: 변화 견해

- ① 많이 변화 ② 조금 변화 ③ 불변

15. primal: 교류우선순위

- ① 정치 ② 문화·예술·인적교류 ③ 경제 ④ 군사 ⑤ 기타

16. time: 통일가능시기

- ① 단기 ② 중기 ③ 장기

<통일을 위한 전제조건>

17. spolit: 남한의 정치

- ① 안정 ② 개혁

18. secono: 남한의 경제

- ① 발전 ② 개혁

19. smilit: 남한의 군사

- ① 강화 ② 감축

20. north: 북한

- ① 체제안정 ② 체제변화 ③ 개혁·개방 ④ 군비감축

21. intcond: 국제환경

- ① 교차승인 ② 북한의 고립화

22. lead: 통일주도

- ① 남한정부 ② 남한정당 ③ 남한기업

- ④ 남한 민중·재야단체 ⑤ 남한 비정치민간단체
- ⑥ 남한 민·관합동 ⑦ 북한정부 ⑧ 북한정당
- ⑨ 주변강대국 ⑩ 국제기구

23. method: 통일방법

- ① 한민족공동체 ② 흡수통일 ③ 기타

24. kim1: 김일성에 대한 평가

- ① 긍정 ② 부정

25. kim2: 김정일에 대한 평가

- ① 긍정 ② 부정

26. system: 김정일체제 평가

- ① 긍정 ② 부정

부록 4: 통일 및 북한관련 언론인 설문지

1. 현재 한국의 언론은 통일문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영향이 크다.
 - ② 다소 영향이 크다.
 - ③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④ 영향이 거의 없다.

2. (앞의 문제에서 영향이 크다고 대답하신 분만 해당합니다)
통일문제에서 어떤 부분에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3. (앞의 문제에서 영향이 크지 않다고 대답하신 분만 해당합니다) 통일문제에 한국언론이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 현재 한국 언론의 통일 및 북한관련 보도에 대해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잘하고 있음	다소 잘하고 있음	다소 못하고 있음	매우 못하고 있음
북한의 실상보도				
남북한 주민간 이질감해소				
통일의욕고취				
정부의 통일정책전달				
남한의 각종 통일운동보도				
민족화합				
통일에 대한 국제적 환경				

5. 통일 및 북한관련 기사를 작성하실 때 주로 의존하는 정보원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기사 작성시 애로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5.1. 정보원:

5.2. 애로사항:

6. 통일 및 북한에 관련된 다음의 정보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하고 계십니까? 가장 신뢰도가 높은 경우를 10점 만점으로 평가해주십시오.

6.1. 한국 정부 발표 ()점

6.2. 외국 정부 발표 ()점

6.3. 국내 언론 보도()점

6.4. 해외 언론 보도()점

6.5. 국내 전문가()점

- 6.6. 해외 전문가()점
 - 6.7. 국내 연구기관(대학포함)()점
 - 6.8. 해외 연구기관(대학포함)()점
 - 6.9. 북한 정부 발표()점
 - 6.10. 북한 언론 보도()점
 - 6.11. 귀순자의 증언()점
7. 현재 선생님이 속한 회사에서 다루는 통일 및 북한관련 보도가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
 8. 선생님은 통일문제에 대한 보도를 다룬 경험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년
 9. 통일 및 북한관련 기사를 작성하는 경우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표시하여 주십시오.
 - ① 민족의 이익 ()
 - ② 국가의 이익 ()
 - ③ 정부의 이익 ()
 - ④ 회사의 입장 ()
 - ⑤ 개인적 신념 ()
 10. 현 정부의 통일정책을 평가하여 주십시오. 문제가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1. 남북한 언론교류에 대한 선생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12. 통일 및 북한관련 보도에서의 문제점과 그 원인을 말씀해 주십시오.
13. 통일문제에 대한 바람직한 정부와 언론의 관계를 말씀해주십시오.
14. 통일과정에서 언론이 수행하여야 할 기본적인 역할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5. 다음의 몇 가지 사항에 대한 선생님의 간단한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 15.1. 보안법 개폐 문제
 - 15.2. 한총련과 범민련의 통일운동
 - 15.3. 민간기업의 남북경협
 - 15.4.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 15.5. 4자회담
 - 15.6. 시민사회 통일운동

◎ 發刊資料目錄 案內 ◎

<세미나시리즈>

- 91-01 轉換期の 東北亞 秩序와 南北韓 關係
- 91-02 岐路에 선 北韓의 經濟社會: 實相과 展望
- 91-03 北韓體制的 變化: 現況과 展望
- 92-01 南北和解·協力時代, 우리의 座標와 課題
- 92-02 北韓의 權力構造와 金日成 이후 政策方向 전망
- 92-03 北韓의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 92-04 韓半島 周邊4國의 對北韓政策
- 92-05 轉換期の 南北韓關係: 現況과 展望
- 93-01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
- 93-02 北韓 核問題: 展望과 課題
- 93-03 中國의 改革·開放
- 93-04 北韓開放에 대한 周邊4強의 立場
- 93-05 南北韓 關係 現況 및 94年 情勢 展望
- 94-01 北韓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展望
- 94-02 南北韓關係와 美國
- 94-03 예멘 統一의 問題點
- 94-04 金日成사후 北韓의 政策展望과 우리의 統一方案
- 94-05 統一文化와 民族共同體 建設
- 94-06 南北韓關係 現況 및 95年 情勢展望

- 95-01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方案 摸索
- 95-02 남북화해·협력의 실천지표: 「민족발전공동계획」
- 95-03 金正日 政權의 向方
- 95-04 南北韓關係 現況 및 '96年 政勢 展望
- 96-01 북한정세 변화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研究報告書>

- 91-01 第2次大戰後 新生國家의 聯邦制度 運營事例
- 91-02 北韓聯邦制案의 分析 및 評價
- 91-03 美國聯邦制 研究: 歷史的 發展過程을 中心으로
- 91-08 韓半島 非核地帶化 主張에 대한 對應方向
- 91-09 東西獨 事例를 통해 본 南北韓關係 改善方案: 정상회담과 기본조약체결 사례 중심
- 91-10 國際的 平和保障 事例研究
- 91-11 在野統一案 研究
- 91-12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化와 東北亞秩序 改編: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
- 91-13 北韓體制的 實相과 變化展望
- 91-14 「한민족공동체」具體化方案 研究: 社會·文化·經濟 交流·協力 中心
- 92-01 統一獨逸의 分野別 實態 研究

- 92-02 中國의 改革·開放 現況과 展望: 北韓의 中國式 改革·
開放모델 受容 可能性과 關聯
- 92-03 美國의 對韓半島政策: 韓國安保와 南北韓 統一問題를
중심으로
- 92-04 日本의 國際的 役割增大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
亞秩序 豫測(II)
- 92-05 1992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2-06 軍備統制 檢證 研究: 理論 및 歷史와 事例를 中心으로
- 92-07 北韓住民의 人性研究
- 92-08 國際社會에서의 南北韓間 協力方案 研究
- 92-09 日本의 對韓半島政策
- 92-10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 92-11 東北亞 經濟協力の 發展方向
- 92-12 統一獨逸의 財政運用 實態研究: 統一關聯 財政政策 中心
- 92-13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
- 92-14 南北韓 社會·文化共同體 形成方案: 社會·文化的 同質性
增大方案 中心
- 92-15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
- 92-16 東北亞 新國際秩序下에서의 韓半島 統一基盤 造成方案
- 92-17 南北韓 經濟共同體 形成方案
- 93-01 1993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3-02 金日成著作 解題
- 93-03 日本의 對北韓政策

- 93-04 中國의 改革·開放 加速化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V)
- 93-05 中·臺灣關係의 現況과 發展方向
- 93-06 美國 클린턴 行政府의 東北亞政策과 東北亞秩序 變化: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II)
- 93-07 東北亞 地域에서의 多者間 安保協力體 形成展望과 對應策
- 93-08 獨逸統一後 東獨地域에서의 私有化政策 研究
- 93-09 對北 投資保護 및 紛爭解決方案 研究
- 93-10 脫冷戰期 北韓의 對中國·러시아 關係
- 93-11 北韓 軍事政策의 展開樣相과 核政策 展望
- 93-12 北韓의 人權實態 研究
- 93-14 베트남 統合事例 研究
- 93-15 金正日著作 解題
- 93-16 韓半島 軍費統制方案 研究: 유럽 軍費統制條約의 示唆點과 관련하여
- 93-17 北韓 家族政策의 變化
- 93-18 主體思想의 理論的 變化
- 93-19 예멘 統合事例 研究
- 93-20 北韓 政治社會化에서 傳統文化의 役割: 北韓映畫分析을 中心으로
- 93-21 北韓의 에너지 수급실태 연구
- 93-22 北韓 國營企業소의 管理運營體系

- 93-23 社會主義體制 改革・開放 事例 比較研究
- 93-24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改訂版)
- 93-25 「한민족 공동체」形成過程에서의 僑胞政策
- 93-26 日本의 核政策
- 93-27 東北亞의 新經濟秩序
- 93-28 러시아聯邦의 對北韓政策
- 93-29 南北韓 政治共同體 形成方案 研究
- 93-30 統一論議의 變遷過程 1945~1993
- 94-01 북한 관료부패 연구
- 94-02 美國과 日本의 對北韓 關係改善과 南北韓關係
- 94-03 韓國의 對러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04 中・臺灣의 統一政策 比較研究
- 94-05 北韓의 社會間接資本 實態分析
- 94-06 主體思想의 內面化 實態
- 94-07 金正日 리더쉽 研究
- 94-08 北韓 民族主義 研究
- 94-09 金正日의 軍事權力基盤
- 94-10 韓國의 對中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11 中國과 日本의 軍事力 增強이 韓半島安保에 미칠 影響
- 94-12 統一韓國의 政黨制度와 選舉制度
- 94-13 南北聯合 形成 및 運營 方案研究
- 94-14 金正日體制的 對南政策 展望

- 94-15 北韓과 中國의 經濟關係 分析
- 94-16 北韓 指導부의 情勢認識 變化와 政策展望
- 94-17 북한의 대외경제 개방정책 현황과 전망
- 94-18 統一韓國의 對外經濟協力 方向: 亞·太地域 多者間協力
關聯
- 94-20 「조선전사」 解題
- 94-21 1995年 NPT延長會議와 韓國의 對策
- 94-23 北韓 住民들의 價値意識 變化: 蘇聯 및 東歐와의 비교
연구
- 94-24 韓國 民族主義 研究
- 94-26 中國과 北韓의 政治體制 比較研究: 黨·軍關係의 變化와
關聯
- 94-27 統一韓國의 登場에 따른 東北亞地域 安保構造 變化
對應策
- 94-28 南北韓 文化政策 比較 研究
- 94-29 南北韓 協商行態 比較研究
- 94-30 南北韓 特殊關係의 法的 性格과 運營方案
- 94-31 統一韓國의 權力構造
- 94-32 統一韓國의 社會福祉政策
- 94-33 統一韓國의 政治理念
- 94-34 統一以後 國民統合 方案 研究
- 94-35 統一韓國의 經濟體制
- 94-36 國際機構를 통한 南北韓 交流·協力增大 方案 研究

- 95-01 리·北關係 變化展望과 韓國의 對應方案
- 95-02 金正日 政權의 人權政策 變化展望
- 95-03 北韓 知識人政策의 變化
- 95-04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方案
- 95-05 金正日 政權의 權力엘리트 研究
- 95-07 서독의 분단질서관리 외교정책 연구
- 한국 통일외교에 대한 시사점 모색 -
- 95-08 北韓의 對美國政策 變化 研究
- 95-09 韓·日關係 變化展望과 韓國의 對應方案
- 95-10 金正日 體制下의 軍部役割: 持續과 變化
- 95-11 남북한 군비통제의 포괄적 이행방안: 미·북관계 및
남북관계 개선 관련
- 95-12 독일의 정치교육 연구
- 한반도 통일대비 정치교육에의 시사점 분석 -
- 95-13 북한의 협상전술 특성 연구-남북대화 사례를 중심으로
- 95-14 남북한 양자간 및 동북아 다자간 원자력협력에 관한
연구
- 95-15 북한의 경제특구 투자환경 연구: 중국·베트남과의 비교
- 95-17 鄧小平 死後 中國의 國內情勢와 韓半島政策 展望
- 95-18 北·美關係와 韓·美關係 變化展望
- 95-19 북한 주요 기초문헌 해제집(III): 「근로자」 해제
- 95-21 탈냉전기 중북한관계 변화 연구

- 95-22 북한의 경제개혁과 남북경협
- 95-23 통일문제에 대한 세대간 갈등 해소 방안
- 95-24 지역갈등 해소방안 연구: 국내적 통일기반 조성방안
- 95-25 金正日 政權의 對外政策 變化 展望
- 95-26 1995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6-01 김정일의 당권장악과정 연구
- 96-02 통일과정에서 매스미디어의 역할

<統一情勢分析>

- 91-01 韓·蘇, 日·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2 고르바쵸프 權力的 現況과 展望
- 91-03 李鵬 中國總理의 訪北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4 第85次 國際議會聯盟(IPU) 平壤總會 結果分析
- 91-05 中·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 91-06 北·日, 北·美關係 變化展望과 對策
- 91-07 北韓의 유엔加入宣言의 影響과 政策變化展望
- 91-08 美國의 東北亞 安保政策 基調와 最近動向

- 91-09 유고슬라비아의 民族葛藤과 聯邦解體 危機
- 91-10 中國의 對韓政策 展望
- 91-11 엘친의 러시아大統領 當選이 蘇聯國內情勢에 미칠
影響 分析
- 91-12 美·蘇의 對 東北亞政策과 東北亞 軍事秩序 再編 可能性
- 91-13 美·蘇 頂上會談의 結果 分析
- 91-14 戰術核 관련 부시 美大統領 宣言이 東北亞 및 韓半島
安保에 미치는 影響
- 92-01 부시 美國大統領의 아시아4個國 巡訪結果 分析: 南·北
韓關係와 관련하여
- 92-02 豆滿江地域開發計劃 發展方向
- 92-03 中國의 改革·開放 深化가 北韓에 미치는 影響
- 92-04 러시아聯邦의 改革과 韓·러關係 展望
- 92-05 東北亞情勢와 統一環境: 1992年 上半期
- 92-06 북방정책 이후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
- 92-07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 開發代案 및 法制
度 中心
- 93-01 最近 러시아聯邦의 政局推移: 國民投票 結果를 中心으로
- 93-02 北韓 核問題의 展開過程 分析 및 展望
- 93-03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1~6)
- 93-04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北韓의
對南政策

- 93-05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體 構成展望과 南北韓關係
- 93-0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 7~9)
- 93-07 中國의 核實驗이 國際 및 東北亞情勢에 미칠 影響
- 93-08 第5次 亞·太經濟協力體(APEC)會議를 계기로 본 亞·太地域 協力の 發展方向
- 93-09 1993年 12月 黨 中央委 全員會議 및 最高人民會議 結果 分析
- 94-01 美國의 對韓半島 政策: 北韓 核問題와 美北關係改善을 中心으로
- 94-02 中國의 對北韓政策: 現況과 展望
- 94-03 북한의 대외개방 현황과 전망: 외자유치 관련법 제정을 중심으로
- 94-04 러시아의 權力構造 改編에 따른 對內·外政策 展望
- 94-05 北韓核問題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우리의 對中政策 方向
- 94-06 核關聯 北韓의 協商戰略戰術 分析
- 94-07 韓·日, 韓·中 頂上會談 結果分析
- 94-08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1~3)
- 94-09 北韓 最高人民會議 第 9期 7次會議 結果分析
- 94-10 韓·러關係 定立方案: 1994年 6月 頂上會談을 契機로
- 94-11 탈북자 발생 배경 분석
- 94-12 北韓의 南北頂上會談 提議 意圖 및 會談의 展望
- 94-13 무라야마(村山) 內閣의 對內外政策 展望

- 94-14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4~6)
- 94-15 金正日 政權의 登場과 政策 展望
- 94-1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7~9)
- 94-17 李鵬 總理의 訪韓結果 分析과 對中政策 方向
- 94-18 美國의 中間選舉 以後 對韓半島政策 變化展望
- 94-19 北韓의 變化와 金正日 政權의 將來
- 94-20 核·經協連繫 緩和措置와 北韓의 對應政策 展望
- 95-01 鄧小平 死後 中國의 國內政勢 및 韓半島政策 展望
- 95-02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5. 1~3)
- 95-03 中國의 政局展望: 第8期 全人大 3次大會 結果를 中心으로
- 95-04 金正日 承繼體制 鞏固化 動向
- 95-05 北韓의 食糧支援 要請背景과 對北韓 食糧支援 方案
- 95-06 金日成 死後 1年: 북한정세의 동향과 전망
- 95-07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廢棄의 意味와 評價
- 95-08 江澤民 中國 國家主席 訪韓 結果分析
- 96-01 北韓의 承繼政治 動向: 2·16 生日行事를 中心으로
- 96-02 中國의 對內政策과 對臺灣政策 展望: 제8기 全人大 4차회의 結果分析을 中心으로
- 96-03 北韓의 對美·中政策 懸案과 展望
- 96-04 周邊4國 頂上會談과 韓半島 安保環境
- 96-05 러시아 大選結果 分析

96-06 金日成 死後2年: 北韓政勢의 動向 및 展望

96-07 나진-선봉지대 개발계획과 남북한 경제관계 전망

<世界主要事件日誌>

91-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4. 1 ~ 1991. 6. 30)

91-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7. 1 ~ 1991. 9. 30)

91-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10. 1 ~ 1991. 12. 31)

92-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 1 ~ 1992. 3. 31)

92-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4. 1 ~ 1992. 6. 30)

92-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7. 1 ~ 1992. 9. 30)

92-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0. 1 ~ 1992. 12. 31)

93-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 1 ~ 1993. 3. 31)

93-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4. 1 ~ 1993. 6. 30)

93-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7. 1 ~ 1993. 9. 30)

93-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0. 1 ~ 1993. 12. 31)

94-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 1 ~ 1994. 3. 31)

94-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4. 1 ~ 1994. 6. 30)

94-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7. 1 ~ 1994. 9. 30)

94-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0. 1 ~ 1994. 12. 31)

95-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1. 1 ~ 1995. 3. 31)

95-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4. 1 ~ 1995. 6. 30)

- 95-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7. 1 ~ 1995. 9. 30)
- 95-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10. 1 ~ 1995. 12. 31)
- 96-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6. 1. 1 ~ 1996. 3. 31)
- 96-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6. 4. 1 ~ 1996. 6. 30)

<年例情勢報告書>

- 91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1~1992
- 9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2~1993
- 93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3~1994
- 94-01 北韓 核問題斗 南北關係
- 94-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4~1995
- 95-01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5~1996

<論 叢>

- 統一研究論叢 創刊號(1992. 6)
- 統一研究論叢 第1卷 2號(1992. 12)
- 統一研究論叢 第2卷 1號(1993. 7)
- 統一研究論叢 第2卷 2號(1993. 12)
- 統一研究論叢 第3卷 1號(1994. 8)
- 統一研究論叢 第3卷 2號(1994. 12)

統一研究論叢 第4卷 1號(1995. 8)

統一研究論叢 第4卷 2號(1995. 12)

統一研究論叢 第5卷 1號(1996. 7)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1(199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2(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3(1994)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4)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4(1995)

한독 WORKSHOP : ECONOMIC PROBLEMS OF NATIONAL
UNIFICATION
(1993)

한미 WORKSHOP : US-Korean Relations at Time of Change
(1994)

<資 料>

- 92-01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國文篇)
- 92-02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外國語篇)
- 93-01 藏書目錄: 單行本·研究報告書
- 93-02 藏書目錄: 特殊資料
- 93-03 獨逸 統一條約 批准法律
- 94-01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上)
- 94-02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中)
- 94-03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下)
- 95-01 藏書目錄: 單行本·研究報告書(追錄I)
- 95-02 藏書目錄: 特殊資料(追錄I)

<통일문화시리즈>

- 94-01 統一文化研究(上)
- 94-02 統一文化研究(下)
- 95-01 統一과北韓社會文化(上)
- 95-02 統一과北韓社會文化(下)

통일과정에서 매스미디어의 역할

研究報告書 96-02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政策研究室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산 5-19

전화 : 237-9288, FAX : 232-5341

印刷處 성진문예사 전화 : 266-3033

印刷日 1996년 10월 일

發行日 1996년 10월 일
